

상장사 · 중소기업의 투명회계 · 적법세금 · 성공경영 정보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공인회계사 조세 eAnSe.com

온라인 30분내 Q&A 문서답변과 방송



중기업
경영관리
외주화

2022/ 11/ 30 통권 1599호

CEO 에세이 - 이해익원장

CEO는 고객 취향을 따른다

2022년 종합부동산세,
12월 15일 까지 납부하세요

경영관리임직원 재경컨설팅 제안

- 박윤종 회계사:
영리법인·비영리비공익법인·공익법인의 구분납세
의무

CFO·회계실무자·조세전문가 정보

- 면세사업자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 2022년 종합부동산세, 12월 15일 까지 납부하세
요
- 국세청, 기업의 국제거래에 대한 이중과세 부담
430건 해결
- 외화자금을 빼돌리고 국부 유출을 고착화하는 역
외 탈세자 53명 세무조사

CMO·마케팅 Tax consulting 색션

-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주식의 시가로 감지하여
소각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 아님 (p.14)

CEO·CFO·COO·회계책임자·조세전문가·재경실무자·총무담당자·모든 관리자용 **名品** 주간지

전직원 회람 공지 MEMO+경영관리자의 재무의사결정과 稅計經營戰略

〈직장소속근로자·업무실행자들의 소득지급방법과 각종 세금공과금들〉

소득종류	지급방법	소득공제 등 원가	적용세율 개념	4대보험부과계산	지급명세
근로소득	정상근무	소득단계별 공제 (70%-2%) 연 3천만원 내외	일반종합소득 세율 (6%-45%)	근로소득 전체에 대해 직장보험 18% 내외	6개월 간이지급 명세 (7월, 1월말)
일용 근로소득	일자별 계산	매일당 15만원 × 200일 근무시 = 3천만원	6% 단일세율 (세액공제 55%)	일용근로소득 전체에 대해 직장보험 18% 내외	매월 지급명세
사업소득	성과별 계산	사업자별 복식회계 재무제표(손익 계산서) 작성: 50% 내외 소득	일반 종합소득 세율	지역보험가입자 임(연 총액 1300선에서 4대보험 부과 안되는 구간)	매월 간이지급 명세 (다음달 말)
퇴직소득	퇴직시 계산	환산급여의 연분연승 적용 (약 40% 내외 공제)	일반 종합소득 세율	4대보험 부과되지 않음	퇴직시 지급명세
기타소득	일시 우발적	열거 안되면 비용없음 열거된 소득은 60% 비용인정	40%에 일반 중소세율	4대보험 부과되지 않음 (지역가입자 소득으로 추가됨)	연단위 지급명세

(안세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 제공)

안세회계법인
02-829-7557

회계·경리·세무·재무·인사·노무·총무·법무·기획·재경(AnSe consulting)
경영관리 · 총무 outsourcing + secretarial 서비스 + 중소기업창업·보육·지원센터

안건조세정보
02-829-7575

주간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통권 1599호 / 주간 48호

2022. 11. 30. (수)

· 발 행 인 : 이 윤 선
· 제 작 : (주) 안건조세정보
· 대표전화 : (02) 829-7575
FAX : (02) 718-8565



♣ 회원가입 문의 안내

· 서울·수도권·경기·인천
전화 : (02) 829 - 7575
팩스 : (02) 718 - 8565
· 부산·경남
전화 : (051) 642 - 3988
팩스 : (051) 642 - 3989
· 대구·경북
전화 : (053) 654 - 9761
팩스 : (053) 627 - 1630
· 대전·충청
전화 : (010) 3409 - 2427
팩스 : (042) 526 - 1686
· 수원·안산
전화 : (010) 5255 - 6116

♣ 매월 구독·자문료 5만원
온라인 입금계좌
· 우리은행
594 - 198993 - 13 - 001

**정회원(주간+월간 등)
월 구독료
5만원**

eAnSe.com의 차별화 특징

- ① 오늘 30분내 Q&A 전송
- ② 핵심내용 영문번역
- ③ 재경전반 동영상강의
- ④ 즉답(010-2672-2250)
- ⑤ 온라인 세무상담실
- ⑥ 모든 정보 통합검색
- ⑦ 마케팅 세무회계전략
- ⑧ CEO·CFO 경영에세이
- ⑨ 전담회계사 파견자문
- ⑩ 세무·회계·재경고문
- ⑪ 최고경영자의 세금전략

본지는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최고경영자 재경전략	직장소속근로자·업무실행자들의 소득지급방법과 각종 세금공과금들	표지
긴 급 시 사 해 설	영리법인·비영리비공익법인·공익법인의 구분납세의무	2
C E O 에 세 이	CEO는 고객 취향을 따른다	3
세 무 · 회 계 상 담 자 문 (남들은 무슨 고민할까?)	- 퇴직장산 특례 적용 범위 - 변제기간이 종료 된 화생채권 미회수분 대손처리는 신고조정으로 처리 할 수 있을까요? - 해외매출처에서 일부 지원받은 수출비용(포워딩,통관)에 대하여 부가세 신고 문의 - 법인 토지,건물 일괄 매매시 세금계산서 발급여부?	5 6
눈 에 맞 는 절 세 미 인	면세사업자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 세가 적용된다	7
매 일 절 세 재 무 요 점	- 2022년 금융투자소득세 세법개정안 - 전세계 횡재세 도입 현황	9 10
직 장 인 Survival	대화의 신! 래리킹의 말잘하는 비법	11
최 신 판 례 예 규 (이런저런 유권해석)	-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따른 과점주주는 주주1인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합계액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 을 초과하는 경우 그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말하는 것임 (서면자본거래-1454, 2022.05.17) -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주식을 시가로 소각하는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의2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기해석사례(서면-2020-자본거래-3107, 2020.07.16.)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서면자본거래-1164, 2022.03.22)	12 13
세 정 뉴 스 와 해 설	국세청 중부세 고지서 배부...약 131만명 대상	14
마케팅 Tax consulting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주식을 시가로 감자하여 소각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 아님	14
세 무 정 보	- 2022년 종합부동산세, 12월 15일 까지 납부하세요 - 국세청, 기업의 국제거래에 대한 이중과세 부담 430건 해결 - 외화자금을 빼돌리고 국부 유출을 고착화하는 역외 탈세자 53명 세 무조사	15 31 37
세 무 환 율 정 보	부가세 영세를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 준·재정환율	4

영리법인 · 비영리비공익법인 · 공익법인의 구분과 납세의무



박윤중 공인회계사 (안세회계법인)

- (전)한국외대 경영대학 겸임교수, (전)국민대 경영대 겸임교수
- 공인회계사·경영학박사(마케팅조세전략, 회계경영학원론)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와 서울대 경영대학원 졸업
- 다수우량기업 회계자문(SK증권, 지오다노, 동서그룹 등)

가업승계 · 증여 · 상속자문
기업경영권
양도 · 양수 컨설팅
(829-7575)

개념구분	영리법인	비영리비공익법인	비영리공익법인
근거법률	상법	민법 제32조	민법 제32조
조직유형	회사(주식, 유한, 합자, 합명회사 등)	주로 사단법인	주로 재단법인
이익과세	모든 순익에 법인세 과세	수익사업만 과세	수익사업만 과세
수입비용	매출액 - 매입액, 비용 = 이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원의 의무 회비 • 별도수익 사업과세 	출연재산수익 + 기부금 등
조직 목표	영리이익의 배분	사단관계자 특정이해 보호	불특정 다수 공익 (종교, 자선, 학술 등)
전용계좌 개설	해당없음	해당없음(종교사업 등)	해당됨 (미개설 가산세 0.5%)
외부 기부금 등	익금산입 이익과세	기부금 단체 아님	상속 · 증여세 과세안됨 (고유목적사업)
해산잔여재산	출자주주에 배당	구성원에게 배분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일유형재단이나 • 국가 등에 귀속

CEO는 고객 취향을 따른다



이해익 원장 : 리즈경영컨설팅 대표컨설턴트·CEO칼럼니스트

- 한국CEO연구 포럼 연구위원장, 머니투데이에 CEO 에세이 연재
- (전)진로그룹 이사·캠브리지총괄전무, 한국능률협회 교수요원
-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기업평가위원장으로 활동
- (겸임)한국팔기회고문, 한국표준협회 경영고문, 최고경영자 과정 출강
- 서울상대졸업 011-241-8558, haeikrhee@hotmail.com

까르푸는 갑자기 등장하여 신도시를 중심으로 빠르게 퍼져 나갔다. 대형 할인마트의 개념이 널리 퍼지지 않았던 당시 1조 2천억원을 쏟아 부으며 확대해 나갔지만, 결국 부산 사상점을 마지막으로 철수했다.

까르푸는 세계 30개국 이상에서 12,300개의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한때 세계2위를 달렸던 프랑스계 다국적 유통업체다. 그런 까르푸가 유독 한국에서만 부진을 면치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까르푸는 이마트, 삼성 테스코(홈플러스), 롯데마트의 공세를 이기지 못했다. 당시 세계 할인점 업계의 ‘빅2’가 한국에서 토종 할인점에 밀려 고전했던 것은 국제 유통업계에서도 화제였다. 월마트와 까르푸의 실패원인은 한국 소비자들의 ‘독특한 취향’을 무시한 것 때문이다.

고객 무시하면 실패 뒤따라

여느 국가에서처럼 월마트와 까르푸는 최소한의 직원과 서비스로 비용을 줄인다. 대신 많은 물건을 싼 가격으로 공급하면 잘 팔릴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한국의 고객들은 백화점 수준의 친절한 서비스를 원했다. 또 한국인들은 할인점에서 가족이 함께 쇼핑과 식사, 오락 등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원한다. 그것을 도외시켰다는 얘기가다.

이와 함께 매장의 구조도 한국인들에게는 맞지 않았다. 외국계 할인점들은 높은 진열대에 상품을 쌓아 놓고 파는 방식이다. 그러나 한국소비자들은 자신의 눈 높이에서 너무 벗어나면 잘 고르지 않는다. 또 까르푸는 쇼핑을 마치고 마지막 계산대를 나서기 전에 신선 식품류를 배치하는 본토식 구조를 한국에도 적용했다. 이것도 입구부터 풍성하게 펼쳐지는 식품류의 배치를 선호하는 한국소비자들을 외면한 것이다. 채소의 소비량이 세계 1위 급으로 월등히 높은 한국의 실정을 간과했다.

성공에도취한 오만이 실패 불러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 그것은 대체로 오만이거나 어리석음 때문이다. 오만은 ‘썸이야’하는 건방짐이다. 그간의 성공에 도취한 방심을 뜻한다. 그리고 세상을 객관적이고 냉철하게 보고 듣고 판단하지 못하는 게 어리석음이다. 사실 CEO의 오만과 어리석음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결과적으로 기업을 위축시키거나 몰락의 길로 접어들게 하는 점에서는 한 통속이다. 의류회사로 대성한 CEO의 경우도 음미해 보면 오만과 어리석음이 교차한다. 미국에서 고가로 잘 팔리는 고급 옷을 한국에도 출시했다. 그러나 형편없이 깨졌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한국소비자들의 눈높이가 낮기 때문’이라고 화를 내며 핑계를 댄 일이었다. OEM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전혀 마케팅과 소비자의 취향을 모르는 그 CEO가 한심하기조차 했다.

첫째, 마케팅의 기능적 특성의 기본은 OEM으로 하는 납품이 아니라 고객을 향한 통합적 노력이다. 둘째, 신제품 개발도 제조보다 시장조사가 우선한다. 그래서 고객의 반응을 보면서 대량 생산에 돌입하는 것이다. 셋째, 기업의 이익관에 있어서도 단기이익보다 장기적 이익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래서 고객 취향의 트렌드를 항시 연구해야 한다. 넷째, 거래의 종료는 납품시기에 있지 않다. 고객만족 이후까지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 거래의 종료는 없다.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통 화 명				11월 18일(금)	11월 21일(월)	11월 22일(화)	11월 23일(수)	11월 24일(목)					
미	달	러	(USD)	1338.40	1340.00	1352.30	1355.70	1352.30					
일	본	엔	(JPY)	954.30	955.20	951.96	960.37	969.63					
영	국	파	운	드	(GBP)	1587.81	1384.09	1598.89	1611.25	1630.67			
캐	나	다	달	러	(CAD)	1004.09	1001.57	1005.46	1013.91	1012.88			
홍	콩	달	러	(HKD)	171.01	171.33	173.33	173.43	172.95				
중	국	원	(CNH)	187.99	187.49	189.06	189.19	189.11					
유	로	화	(EUR)	1387.18	1384.09	1385.30	1396.98	1406.66					
호	주	달	러	(AUD)	895.39	894.92	893.46	900.73	910.77				
싱	가	폴	달	러	(SGD)	973.52	974.72	978.62	983.85	982.03			
말	레	이	시	아	링	기	트	(MYR)	293.93	294.28	295.26	296.00	295.58

퇴직정산 특례 적용 범위

Q 퇴직금 중간 정산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급여 원천징수를 할 수 있는 퇴직정산 특례 적용 범위에 대한 질문입니다.

회사의 사업 포괄 양수도 계약에 의해 승계된 직원의 퇴직으로 당사 근무기간과 양도 회사로부터 승계된 퇴직충당금을 포함하여 당사에서 실행된 퇴직금 중간 정산 기간을 합산하여 이번 퇴직시 근무기간과 퇴직급여를 합산하여 원천징수 세액을 계산하였습니다.

퇴직자로 부터 제출된 중간 정산 문서중 양수도전 회사에서 지급받은 퇴직금 중간 정산 문서가 포함되어 있는데, 양수도전 회사에서 지급받은 퇴직금 중간 정산의 기간및 퇴직급여도 퇴직정산 특례 적용의 대상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A 퇴직금 승계처리여부는 세법에서 판단하는 사항이 아니고 양수도회사간에 결정하는 사항인데 양수도 계약에 의해 근무기간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모두 승계하였다면 원래 귀사의 직원들과 동일하게 처리하면 되므로 양수도전 회사에서 지급받은 중간정산 기간도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변제기간이 종료 된 회생채권 미회수분 대손처리는 신고조정으로 처리할 수 있을까요?

Q 회사 장부에 미수금이 크게 하나 있는데, 법원인가 회생채권이라 8년동안 변제계획이 되어 있었으나 받은 바 없고, 그저 인수 받을때 올해가 8년차가 되는 회생채권이 있다 해서 봤더니 수역이네요. 관련된 회생인가 변제계획 관련된 서류만 있지, 회생채권이 어떻게 정리되었는지 그 서류 또한 없습니다.

이 대손처리와 관련하여 제가 아는 바로는,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나면서 면책결정으로 회수불능이 된건 해당 귀속년도에 신고조정으로 대손처리를 할 수 있는걸로 아는데, 인가결정 이후 변제되어야 하는 채권이 미변제 되는건 귀속을 어떻게 잡아야 하고 대손처리는 신고사항인지 결산사항인지 애매하네요.

A 법원이 회수불능으로 확정한 채권에 대해서만 회수불능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처리가 가능한데, 귀사의 경우처럼 면책결정이 내려지지 않고 변제계획이 있었는데 변제받지 못한 경우라면 대손요건이 충족되지 못한다고 판단됩니다.

귀사의 의견처럼 법원에 회생계획인가를 폐지하고 아예 면책결정을 받거나, 아니면 회수노력을 위한 법률적 절차를 진행하고도 회수가 안되었다는 증거를 수집후 일반 채권처럼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시점에 대손처리를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외매출처에서 일부 지원받은 수출비용(포워딩,통관)에 대하여 부가세 신고 문의

Q 당사에서 해외매출처로 제품 선적을 하고 수출비용(포워딩,통관) 일부를 지원받기로 했습니다.

회계처리는 비용 마이너스 처리할 계획인데 지원받은 비용에 대해서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A 해외 매출처로부터 지원받는 금액은 재화나 용역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고 일종의 사례금 성격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법인 토지.건물 일괄 매매시 세금계산서 발급여부?

Q 법인 대 법인 간 토지.건물 일괄 매매 거래를 할려고 합니다.

향후 세무문제 발생을 대비하여 각 법인이 서로 부동산 감정평가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총 매매 금액은 확정하였으나 토지. 건물 각 안분 금액 확정은 어느 법인 기준으로 안분을 하여야 하는지요?

A 세금계산서 발급은 공급자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토지 건물 일괄매각시 실제 매각거래 금액을 공시지가(토지,건물)나 감정평가기준금액(토지,건물)으로 안분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토지 기준가 + 건물기준가×110%) 비율로 나눔.

면세사업자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상담실 백종훈 차장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아야 한다. 주고받는 세금계산서는 차후 과세자 입장에서는 부가가치세액 산출은 물론 소득·법인세 과세의 기초자료가 되며 국세청의 자동검증자료가 된다. 납세자입장에서는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는 물론이고 개인사업자의 필요경비나 법인의 손금인정에 증빙자료가 된다.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면세사업자의 경우는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발급한 계산서가 소득·법인세 등 과세자료의 기초자료가 된다. 물론 부가세면세사업자는 부가세 납부의무가 없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지만 매입자료는 받을 수가 있다. 이때 매입세금계산서는 과세업자와는 다르게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는 없으나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는 제출해야 한다. 제출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가 적용된다.

과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면세사업자는 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세금계산서란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증빙서류를 말한다.

공급하는 자의 입장에서는 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를 다음 거래단계에 전가시키는 법적장치이다. 반면에 공급받는 자의 입장에서는 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필수적인 증빙서류이다.

즉,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자료로서의 기능, 매입세액공제 증빙의 기능은 물론 소득·법인세법의 근거과세자료로서 기능, 각종 비용인정 증빙으로서의 기능과 각종 공제증빙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또한 송장, 청구서, 대금영수증 등의 부수적인 역할도 수행한다.

따라서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의 올바른 수수가 이루어져야 매출세액에서 거래징수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부가가치세제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이다. 이러한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발급하여야 한다. 단, 공급시기 도래 전에 거래대금의 전부나 일부를 수수하면서 발급하는 경우는 발급하는 때

를 재화 등의 공급시기로 본다.

예외적으로 공급받는 자가 계속적인 거래처인 경우 발급편의를 위해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사업자는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만약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세금계산서"에서 "세금"이란 부가가치세를 말하는데 그냥 계산서하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발행하는 증빙서류로서 매출부가세가 없다. 결국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며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면세사업자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의해 계산서를 발행하며, 매년 2월10일까지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면 된다.

면세사업자라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는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면세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규정은 없으나, 매입세금계산서의 제출의무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매입과 관련해서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부가가치세 일반사업자와 같이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한다.

즉,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누구라도(면세사업자라도)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면세사업자라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이다. 다만, 부가가치세가 산세는 과세업자에게만 적용되므로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는 없다. 따라서 면세사업자도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를 부가세 확정신고기간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때 제출하지 않더라도 법인세법 제120조의3 규정에 따라 1년에 한번(매년 2월 10일) 제출하면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만약 이때에도 제출하지 않으면 법인세법 제75조의8제1항제1호에 따라 공급가액×0.5%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물론 면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상 확정신고기간에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에는 2월 10일까지 제출하지 않더라도 제출한 것으로 본다.

- 안건조세총서, 기업경영회계·세무, 법인세법상세해설서
- 경제신문자료와 공공기관발표자료 등



2022년 금융투자소득세 세법개정안

- 적격집합투자기구의 분배금을 배당소득으로 일원화
- 개정 이유 : 금융회사의 과세집행 부담 완화

현행		개정안
적격집합투자기구의 분배이익은 원천에 따라 소득구분		적격집합투자기구의 분배이익을 배당소득으로 일원화
금융투자소득	분배원천 : 금융투자소득	배당소득
배당소득	분배원천 : 금융투자소득외	
금융투자소득	환매, 양도	금융투자소득



금융소득종합과세 과세표준과 세율(일반세율 적용)

* 2021년 기준, 지방소득세 포함시 최고세율 49.5%

과세표준구간	세율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초과 1억5000만원 이하	35%
1억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2%
10억원 초과	45%



전세계 횡재세 도입 현황

이미 도입한 국가

나라명 (도입시기)	대상업계	개요
영국 (2022년 7월)	석유, 가스	- 석유와 가스 생산 기업 대상 횡재세율 25%서 35%로 상향 - 내년 1월부터 발전소도 45% 횡재세
헝가리 (2022년 7월)	석유, 광업, 항공, 금융 등	- 업종에 따라 다르게 적용(석유 수입사, 저렴한 러시아산 수입 시 브렌트유와 가격 차이 나는 부분에 25% 과세)
그리스 (2022년 5월)	에너지	- 특정 기간 발생한 이익과 전년 동기 이익 차액에 대해 90% 과세
이탈리아 (2022년 3월)	석유, 가스, 전력	- 특정 기간 부가가치 증가분에 25% 과세
스페인 (2021년 9월)	석유, 가스, 전력, 은행	- 작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발전소에 부과 - 은행, 에너지 기업에 내년 초 적용 새 횡재세 추진

도입 검토 중인 국가

미국	석유, 가스	- 바이든 대통령, 의향 표명(의회 통과는 불투명)
독일	전력	- 발전이익 대부분에 과세, 전기료 상한 등 서민생활 지원에 쓸 계획
벨기에	원자력발전소	- 초과이익에 38% 과세 표명
폴란드	종업원 250인 이상 기업	- 2018~20년 평균 이익 초과하는 이익분에 대한 과세 제안
체코	전력, 석유화학, 유통, 은행	- 최근 5년간 평균 과세 소득과의 차액에 과세하는 방안 추진



종합소득세 분납방법 및 예시

납부할 세액		분납 가능 금액
• 25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납부할 세액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
• 500만원 초과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 금액
당초 고지세액	'22.12.15.까지 납부할 금액	'23.6.15.까지 납부할 금액 (=분납신청한 금액)
400만원	250만원	150만원
600만원	600만원~분납 신청한 금액	300만원 이하 금액



대화의 신! 래리킹의 말잘하는 비법

1. 시야를 넓히기 위해 여행을 떠나곤 한다. 하지만 당신이 호기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한다면, 집을 떠나지 않고서도 시야를 넓힐 수 있다.
2. 대화의 첫 규칙은 듣는 것이다. 말하고 있을 때는 아무것도 배울 수 없다.
대담 중 내가 하는 말에서는 아무것도 배울 것이 없다면 고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3. 훌륭한 화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훌륭한 청자가 되어야 한다.
상대방이 한 말에 대하여 적절하게 응대할 수 있는 능력은 곧 뛰어난 대담자들의 기본이다.
4. 상대방은 당신보다는 자신의 희망이나 자신의 문제에 백배나 더 관심이 많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사람은 본래 100만 명을 희생시킨 중국의 기근보다 자신의 치통이 더 중요한 법이다.
6. 프레젠테이션은 말로 보여주는 것이다. 무엇을 말할지, 그리고 시각 자료를 사용하려 할 때에는 반드시 미리 연습을 해보아야 한다.
7. 당신 자신을 팔아라. 내가 팔아야 하는 제품이나 서비스 혹은 나 자신을 이야기할 때는 그것의 특징을 말하지 않고 장점을 말해야 한다.
8. 연설을 잘하기 위한 두 번째 열쇠는 보이스카우트 모토대로 준비하는 것이다.
그것은 항상 대비해야 한다는 진리이다.
9. 명연설은 모두 짧고 간결하지만 담은 뜻이 명확하다. 간략하게 말하기가 쉬운 일은 아니다.
핵심만을 간략하게 말하는 능력이 가장 많이 요구 되는 경우가 물론 연설이다.
10. '퇴장할 때를 알라' 는 연예계의 격언이 여기에서 다시 적용되는 것이다.
연설을 잘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그때가 언제인지 안다.
11. 그 대신 유명한 연설가의 연설에는 배울 점이 많다. 연설로 성공한 사람들도 자신의 의사를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이 있어서 성공한 것이다. 그들에게 배울 점은 무엇보다도 간결함이다.
12. KISS 법칙 = Keep it simple, stupid
단순하게 그리고 머리나쁜 사람도 알아듣게 하라.
13. 말하기는 하면 할 수록 잘하게 되어 있다. 말하는 방법에 관해 책을 보고 공부할 수도 있고, 방이나 차 안에서 혹은 애완견에게 혼자 말하기를 연습할 수도 있다. 말을 잘하기 위한 연습을 하려고만 한다면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최 신 판 례 예 규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따른 과점주주는 주주1인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합계액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말하는 것임

서면자본거래-1454, 2022.05.17

2018년 3월 31일까지 소득법§168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법§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임대주택의 경우 소득법§167의3①(2)가목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경우 양도하는 임대주택은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종과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사전법규재산-170, 2022.02.25

Ⅰ 질 의

- 신청인은 부동산업 법인(이하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이며, 쟁점법인의 출자비율은 아래와 같음
- 주주인 AA와 BB는 「국세기본법」 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에 해당하지 않으며, 쟁점법인 외 타 법인의 지분을 같이 보유하고 있지 않고, BB는 쟁점법인에 출자만 하고 있는 단순 주주임
- 쟁점법인의 자산 중 부동산(토지)이 차지하는 비율은 95%이며, 주주인 AA와 BB는 보유주식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함

질의

- 주주인 AA와 BB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에 따른 기타주주에 해당하여 보유주식의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지 여부

Ⅰ 회 신

1.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따른 과점주주는 주주1인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합계액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말하는 것임
2.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의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Ⅰ 질 의

- 거주주택 1채와 민간임대주택(단기) 1채를 보유한 1세대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 제11호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임대무기간 내 등록 말소 신청으로 등록이 말소된 후 해당 임대주택 양도시 종과세율 적용 여부

Ⅰ 회 신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2018년 3월 31일까지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임대주택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경우 양도하는 임대주택은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제1호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주식을 시가로 감자하여
소각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 아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주식을 시가로 소
각하는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
39조의2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증여
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기해석사례(서면-2020-자본거래-3107,
2020.07.16.)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서면자본거래-1164, 2022.03.22

■ 질 의

- 민원인은 비상장법인의 대표이사 및 주주로, 동법인
의 주주는 여동생과 모친임
- 대표이사 및 여동생은 모친으로부터 주식을 상속받
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상 시가에 따라 주식을 감자하
여 소각하고자 함

질의

- 상속세및증여세법 상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에 의하
여, 이익 없이 감자가 이루어질 때 증여세를 납부할 의
무가 있는지 여부

■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주식을 시가로 소각하는 경
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의2【감자에 따
른 이익의 증여】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
는 것이며,

기해석사례(서면-2020-자본거래-3107,
2020.07.16.)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세대가「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
에 따른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1세대가 거주주택의 보유기간 중 2
년 이상 거주주택에서 실제 거주하고 양도하
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
할 수 있는 것임

사전법규재산-1788, 2022.05.20

■ 질 의

-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 거주주택 비과
세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경우 양도 당시 세대전원이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지

■ 회 신

귀 사전답변의 경우와 같이 1세대가「소득세법 시
행령」제155조제20항에 따른 장기임대주택과 거주
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1세대가 거주주택의 보유기
간 중 2년 이상 거주주택에서 실제 거주하고 양도하
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
는 것입니다.

한편, 거주주택의 거주기간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기존해석사례(서면-2015-부동산-2133, 2015.11.17.)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5-부동산-2133, 2015.11.17.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9항에 따른 장기임대
주택 보유시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할 때 거주주택의
거주기간은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입
니다(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
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및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주택사업자의 등록을 한 날 이후의 거주기
간을 말함).



세무·회계·경영(TAM)쟁점뉴스 요약

국세청 종부세 고지서 배부...약 131만명 대상

국세청이 21일부터 2022년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배부한다.

고지대상은 주택분 122만명4.1조원, 토지분 11.5만명3.4조원으로 주택토지 중복인원을 제외하면 총 130.7만명7.5조원이다.

고지된 종부세는 내달 15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납부금액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6개월까지 무이자 분납이 가능하다.

종부세 납부유예 신청이 가능한 1세대 1주택자 24만명에게는 별도 안내문이 제공된다. 만 60세 이상, 5년 이상 보유자의 경우 주택을 상속증여하거나 매매할 때까지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고지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합산배제특례 신고(신청)를 하지 못한 납세자는 납부기한까지 자진신고 납부할 수 있다.

국세청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과세물건 조회' 등 각종 도움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서울 종부세 대상자 급증...과세개편 추진

올해 서울 지역 주택분 종부세 과세 대상자가 2017년 대비 약 3.2배 급증(18만4500명→58만4029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류성걸 의원이 국세청의 2022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 통계를 분석한 결과다.

서울 지역 종부세 과세대상 비중은 2017년 7.6% 였지만, 올해는 22.4%로 관측된다. 서울 주택 종부세 부담자의 절반 이상이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였지만, 올해는 48.8%로 내려갔다. 집값 상승으로 강남 외 다른 지역에서도 종부세 납세자가 늘어난 탓이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종부세 과세대상이 1만명 이상인 구는 2017년 3개에서 2022년 16개로 늘었고, 종부세 과세대상 1만명 미만인 구에서도 지난해보다 과세대상이 두 자릿수(26.7%) 늘어나고 있다. 2017년 대비 과세인원 증가율 상위 5개 구는 강동구(5.2배), 노원구(5.0배), 금천구(4.7배), 도봉구(4.5배), 성동구(4.4배) 순으로 나타났다.

고지세액 측면에서는, 서울 지역 주택분 종부세 고지세액은 1조8144억원으로, 2017년(2366억원)보다 약 7.7배 증

가했다.

강남 4구(6.6배)보다는 강남 4구 외의 지역(9.4배)에서 증가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이미 강남에서 낼 사람들은 다 내고 있었던 반면, 강남 4구 외 지역의 집값이 빠르게 올랐기 때문이다.

최근 집값 상승 주 원인은 글로벌 저금리 기조 속에 과잉 유동성 공급에 따른 것이며, 그 부작용으로 고물가 문제가 터지고 있다.

류성걸 의원은 "고액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형평 제고라는 당초 종부세 도입 취지와는 무관한, 평범한 일반 국민들께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종부세가 부자 세금이 아닌 중산층 세금, 서울·수도권 세금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큰 만큼 현재의 징벌적 종부세를 하루 빨리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주택자의 내년 재산세 2020년 수준으로 낮춘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재산세 부과 때 한시적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낮췄다.

주택 실수요자인 1주택자의 '2023년 재산세를 최근 주택가격 하락과 서민 가계부담을 고려해 '2020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한다.

내년에는 서민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기조를 유지하면서,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공시가격 하락 효과 등을 반영하여 추가로 45% 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계획이다.

공시가격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가 정하면 곧바로 시행할 수 있다.

또 종합부동산세는 지난 7월 발표한 정부개편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정부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2023년 종부세액과 납부 인원이 '2020년 수준으로 환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 종합부동산세, 12월 15일 까지 납부하세요

— 국세청, 2022. 11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22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게 11월 21일(월)부터 납부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 (고지인원 및 세액)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인원 및 세액은 주택분 122만 명·4.1조 원, 토지분 11.5만 명·3.4조 원, 총 130.7만 명(주택분과 토지분 중복인원 2.8만 명 제외)·7.5조 원입니다.
- (납부기한 및 분납) 고지된 종합부동산세는 12월 15일(목)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종합부동산세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이자상당가산액 부담 없이 6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합니다.
- (납부유예) 1세대 1주택자 중 일정 요건을 갖춘 고령자(만 60세 이상) 또는 장기보유자(5년 이상 보유)의 경우 납세담보를 제공하여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주택의 양도·증여·상속 등 사유 발생 시까지 유예할 수 있습니다.
 - 납부유예 신청이 가능한 납세자(2.4만 명)에게는 별도의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납부) 종합부동산세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합산배제·특례 신고(신청)를 하지 못한 납세자는 납부기한까지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신고하는 경우 '과세물건 조회' 등 각종 도움자료를 제공받아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납부대상자 및 납부고지서 발송

-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게 '22년 11월 21일부터 순차적으로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여 12월 15일(목)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 '22년 종합부동산세 고지인원 및 세액 |

구분	고지인원	세액
주택분	122만 명	4.1조 원
토지분	11.5만 명	3.4조 원
합 계	130.7만 명*	7.5조 원

* 주택분과 토지분 중복인원 2.8만 명을 제외한 인원

- 납세자가 신고를 원하는 경우 12월 15일까지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지세액은 취소됩니다.

-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아래 과세대상 자산별 기본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됩니다.

과세대상 자산	공제액
· 주택(아파트·다가구 및 단독주택 등)	6억 원(1세대 1주택자 11억 원)
· 종합합산 토지(나대지·잡종지 등)	5억 원
· 별도합산 토지(상가·공장 부속토지 등)	80억 원

-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은 '22.12.15.까지 이며,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 또는 가상계좌 이체를 통해 편리하게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또한, 홈택스·손택스에서 납부하거나 납세고지서로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실 수도 있습니다.

* (홈택스) 홈택스 »신고/납부 »세금납부 »국세납부 »납부할 세액 조회 납부
* (손택스) 손택스 앱 »신고/납부 »국세납부 »납부할 세액 조회 납부

2 분납 신청

- (개요) 종합부동산세 납부세액(농어촌특별세를 제외한 금액 기준)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 아래 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	분납 가능 금액
· 250만 원 초과 500만 원 이하	납부할 세액에서 250만 원을 차감한 금액
· 500만 원 초과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 금액

* 종합부동산세 분납 신청 시 농어촌특별세도 같은 비율로 분납 신청 됨

◆ 분납 신청 사례

당초 고지세액*	'22.12.15.까지 납부할 금액	'23.6.15.까지 납부할 금액 (=분납신청한 금액)
400만 원	250만 원	150만 원
600만 원	600만 원 - 분납 신청한 금액	300만 원 이하 금액

* 사례의 고지세액 등은 농어촌특별세를 제외한 금액임

- ☐ (신청 방법)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간편하게 분납 신청할 수 있으며, 홈택스에서는 납부서 출력도 가능합니다.
- ☐ (분납 기간) 분납 기간은 납부기한으로부터 6개월까지이며, 분납 기간 동안에는 이자상당가산액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 ☐ (납부 방법) 분납대상자는 분납신청 후 전체 고지세액에서 분납 신청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당초 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 또는 가상계좌를 이용하여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또한 6개월 후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고지서에 따라 분납 신청 금액을 납부하실 수 있으며, 분납 기간 중에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3 납부유예 신청

- ☐ (개요) 올해부터 1세대 1주택자 중 고령자 또는 장기보유자는 아래의 신청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양도·상속증여 등 사유 발생 시까지 중부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 납부유예 신청 요건

- ① 1세대 1주택자(일시적 2주택 등 특례 적용으로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납세자 포함)
- ② 만 60세 이상 이거나 주택 보유기간 5년 이상
- ③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 원 이하
- ④ 해당연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 100만 원 초과

- ☐ (신청 방법) 납부유예는 관할세무서에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 (신청 기한) 납부유예 신청 기한은 납부기한 3일 전(12.12.)까지입니다.
- ☐ (납세 담보) 납부유예 신청 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담보의 종류 및 필요 서류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담보의 종류	필요서류 및 준비물
토지·건물*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2부
금전·유가증권	공탁수령증
납세보증보험증권·납세보증서	보험증권, 납세보증서

* 건물을 담보로 제공할 경우 화재보험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함

- (납부 사유) 납부유예 허가 후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납부유예받은 세액과 이자 상당가산액('22년 기준 연 1.2%)을 납부해야 합니다.

◇ 납부 사유

- ① 해당 주택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 ②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 ③ 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자가 아니게 된 경우
- ④ 담보의 변경 또는 그 밖에 담보 보전에 필요한 관할 세무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⑤ 「국세징수법」 제9조 제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그 납부유예와 관계되는 세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⑥ 납부유예된 세액을 납부하려는 경우

4

신고 및 다양한 납세 서비스 제공

- 종합부동산세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납세자가 신고를 원하는 경우 고지와 관계없이 납부기간(12.1.~12.15.)동안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당초 합산배제·과세특례 등 신고(신청)를 하지 못한 납세자도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내용을 반영하여 종합부동산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 다만, 자진 신고 세액이 법적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법에서 정한 요건을 꼼꼼히 확인한 후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납부고지서에는 대략적인 세액산출 근거와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물건 수 및 대표물건 소재지를 기재하였으며,
-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가 상세한 과세물건 내역 및 세액을 홈택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조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홈택스) 홈택스 > 조회/발급 > 세금신고 납부 > 종부세 과세물건 및 세액 상세내역 조회

* (손택스) 손택스 앱 > 조회/발급 > 세금신고 납부 > 종부세 과세물건 및 세액 상세내역 조회

- ☐ 홈택스 전자신고 시 '과세물건 상시조회', '미리채움 서비스' 등 각종 도움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니, 신고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신고 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서식은 국세청 누리집에서 내려받아 작성 후 세무서에 우편 방문 제출 하시면 됩니다.

* (국세청 누리집) 국세신고안내 《종합부동산세》주요서식

- ☐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된 각종 도움자료를 참조하거나
-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관할 세무서 담당자 또는 국세청 국세상담센터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홈택스 상담 (전자신고·신청)	국번 없이 ☎ 126 (음성ARS 또는 보이는 ARS선택-1번-3번)
	종합부동산세 상담	국번 없이 ☎ 126 (음성ARS 또는 보이는 ARS선택-2번-1번)

참고 1 - '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법령 주요 개정내용

- ☐ 공정시장가액비율
- 주택분 공정시장가액비율이 95%에서 60%로 인하, 토지분 공정시장가액비율은 95%에서 100%로 인상
- ☐ 합산배제 기타주택 확대
- (어린이집용 주택)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 어린이집용* 주택
* 위탁운영 국공립어린이집 및 시·군·구 인가를 받은 민간·직장어린이집 등
 - (문화재 주택) 국가등록문화재 주택 → 등록문화재* 주택
* 시장·도지사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등록한 시·도등록문화재 포함
 - (주택건설 목적 멸실주택) 아래의 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여 3년 이내 멸실시키는 주택

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제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주택사업자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제28조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
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에 따라 지정된 혁신지구재생사업의 시행자
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7조~19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마.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 및 주택건설사업자



□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 제외

-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을 주택 수 판정시 제외하여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 적용

* 최초 신고 이후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 계속 적용

구 분	요 건
일시적 2주택	1세대 1주택자가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신규주택을 대체취득하고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상속주택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①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② 소수지분주택* 또는 저가주택** * 소유지분 40% 이하, ** 공시가격 수도권 6억 원 이하, 비수도권 3억 원 이하
지방 저가주택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이면서 수도권·광역시*·특별자치시**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 * 군 제외, ** 읍·면 제외

- 일시적 2주택 요건 미충족시 경감세액 및 이자상당가산액(1일당 0.022%) 추정

□ 세율 적용 시 주택수 산정 특례

- 상속주택,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 납세자 신청 시 해당 물건을 세율 적용 시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

구 분	요 건
상속주택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①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② 소수지분주택* 또는 저가주택** * 소유지분 40% 이하, ** 공시가격 수도권 6억 원 이하, 비수도권 3억 원 이하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이 없는 자가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하여 사용중인 주택의 부속토지

□ 일반 누진세율 적용 법인 확대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 － (적용요건) 사회적기업등 구성원의 주택 공동 사용,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취약계층이나 「주거기본법」에 따른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대한 주거지원
- 종중(宗中)

□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 (신청요건) 과세기준일 현재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납세자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신청 가능

- ① 1세대 1주택자일 것
- ② 만 60세 이상이거나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보유
- ③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
- ④ 해당 연도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 100만 원 초과

- (신청절차) 납세자가 납부기한 3일 전까지 납부유예 신청서를 제출하면 관할 세무서장이 납부기한 만료일까지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통지
- (취소시) 납부유예 허가금액 - 납부한 금액 + 이자상당가산액* 납부
 - * 미납금액 × 납부유예 허가연도의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징수세액 고지일까지 기간 ×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22년 11.21.기준 연 1.2%)

참고 2 - 종합부동산세 세액계산 방식(개인)

구 분	주택분	종합합산 토지분	별도합산 토지분																																																																																								
Σ 공시가격	Σ 주택 공시가격	Σ 종합합산 토지 공시가격	Σ 별도합산 토지 공시가격																																																																																								
-	-																																																																																										
공제금액	6억 원(1세대1주택자 11억 원)	5억 원	80억 원																																																																																								
×	×																																																																																										
공정시장 가액비율	60%	100%																																																																																									
=	=																																																																																										
종 부 세 과세표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종합합산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별도합산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	×																																																																																										
세 율 (%)	<table><tr><th rowspan="2">과세표준</th><th colspan="2">일반</th><th colspan="2">3주택 (조정대상지역 2주택 포함)</th><th rowspan="2">과세표준</th><th rowspan="2">세 율</th><th rowspan="2">누진 공제</th><th rowspan="2">과세표준</th><th rowspan="2">세 율</th><th rowspan="2">누진 공제</th></tr><tr><th>세율</th><th>누진공제</th><th>세율</th><th>누진공제</th></tr><tr><td>3억 원 이하</td><td>0.6</td><td>-</td><td>1.2</td><td>-</td><td>15억 원</td><td>1.0</td><td>-</td><td>200억 원</td><td>0.5</td><td>-</td></tr><tr><td>6억 원 이하</td><td>0.8</td><td>60만 원</td><td>1.6</td><td>120만 원</td><td>이하</td><td></td><td></td><td>이하</td><td></td><td></td></tr><tr><td>12억 원 이하</td><td>1.2</td><td>300만 원</td><td>2.2</td><td>480만 원</td><td>45억 원</td><td>2.0</td><td>1,500</td><td>400억 원</td><td>0.6</td><td>2,000</td></tr><tr><td>50억 원 이하</td><td>1.6</td><td>780만 원</td><td>3.6</td><td>2,160만 원</td><td>이하</td><td></td><td>만 원</td><td>이하</td><td></td><td>만 원</td></tr><tr><td>94억 원 이하</td><td>2.2</td><td>3,780만 원</td><td>5.0</td><td>9,160만 원</td><td>45억 원</td><td>3.0</td><td>6,000</td><td>400억 원</td><td>0.7</td><td>6,000</td></tr><tr><td>94억 원 초과</td><td>3.0</td><td>11,300만 원</td><td>6.0</td><td>18,560만 원</td><td>초과</td><td></td><td>만 원</td><td>초과</td><td></td><td>만 원</td></tr></table>	과세표준	일반		3주택 (조정대상지역 2주택 포함)		과세표준	세 율	누진 공제	과세표준	세 율	누진 공제	세율	누진공제	세율	누진공제	3억 원 이하	0.6	-	1.2	-	15억 원	1.0	-	200억 원	0.5	-	6억 원 이하	0.8	60만 원	1.6	120만 원	이하			이하			12억 원 이하	1.2	300만 원	2.2	480만 원	45억 원	2.0	1,500	400억 원	0.6	2,000	50억 원 이하	1.6	780만 원	3.6	2,160만 원	이하		만 원	이하		만 원	94억 원 이하	2.2	3,780만 원	5.0	9,160만 원	45억 원	3.0	6,000	400억 원	0.7	6,000	94억 원 초과	3.0	11,300만 원	6.0	18,560만 원	초과		만 원	초과		만 원									
	과세표준		일반		3주택 (조정대상지역 2주택 포함)								과세표준	세 율	누진 공제	과세표준	세 율	누진 공제																																																																									
		세율	누진공제	세율	누진공제																																																																																						
	3억 원 이하	0.6	-	1.2	-	15억 원	1.0	-	200억 원	0.5	-																																																																																
	6억 원 이하	0.8	60만 원	1.6	120만 원	이하			이하																																																																																		
	12억 원 이하	1.2	300만 원	2.2	480만 원	45억 원	2.0	1,500	400억 원	0.6	2,000																																																																																
	50억 원 이하	1.6	780만 원	3.6	2,160만 원	이하		만 원	이하		만 원																																																																																
	94억 원 이하	2.2	3,780만 원	5.0	9,160만 원	45억 원	3.0	6,000	400억 원	0.7	6,000																																																																																
94억 원 초과	3.0	11,300만 원	6.0	18,560만 원	초과		만 원	초과		만 원																																																																																	
=	=																																																																																										
종합 부동산 세액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토지분 종합합산세액	토지분 별도합산세액																																																																																								



공 제 할 재산세액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중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금액에 부과된 재산세 상당액 ☞ 과세대상 유형별(주택, 종합합산 토지, 별도합산 토지)로 구분하여 계산		
산출세액	주택분 산출세액	종합합산 토지분 산출세액	별도합산 토지분 산출세액
세액공제 (%)	<1세대 1주택> 보유 : 5년(20), 10년(40), 15년(50) 연령 : 60세(20), 65세(30), 70세(40) ☞ 중복적용 가능(한도 80%)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세부담 상한 초과세액	[직전년도 총세액상당액(재산세 + 종부세) X 세부담상한율]을 초과하는 세액 ☞ 세부담상한율 : 조정대상지역 2주택(300%), 3주택(300%), 그 외(150%)		
납 부 할 세 액	각 과세유형별 세액의 합계액 [250만 원 초과 시 분납 가능(6개월)]		

참고 3 - 종합부동산세 세액계산 방식(법인)

구 분	주택분			종합합산 토지분			별도합산 토지분		
Σ 공시가격	Σ 주택 공시가격			Σ 종합합산 토지 공시가격			Σ 별도합산 토지 공시가격		
공제금액	해당없음			5억 원			80억 원		
공정시장 가액비율	60%			100%					
종 부 세 과세표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종합합산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별도합산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세 율(%)	과세표준	일반	3주택 (조정대상지역 2주택 포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3억 원 이하	3.0	6.0	15억 원 이하	1.0	-	200억 원 이하	0.5	-
	6억 원 이하								

	12억 원 이하			45억 원 이하	2.0	1,500 만 원	400억 원 이하	0.6	2,000 만 원
	50억 원 이하			45억 원 초과	3.0	6,000 만 원	400억 원 초과	0.7	6,000 만 원
	94억 원 이하								
	94억 원 초과								
=									
종합부동산세액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토지분 종합합산세액			토지분 별도합산세액		
-									
공제할 재산세액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중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금액에 부과된 재산세 상당액 ☞ 과세대상 유형별(주택, 종합합산 토지, 별도합산 토지)로 구분하여 계산								
=									
산출세액	주택분 산출세액			종합합산 토지분 산출세액			별도합산 토지분 산출세액		
-									
세액공제(%)	해당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세부담당한 초과세액	해당없음			150%					
=									
납부할 세액	각 과세유형별 세액의 합계액 [250만 원 초과 시 분납 가능(6개월)]								

참고 4 - 종합부동산세 고지(신고) 및 납부 관련 문답

① 종합부동산세 과세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 ☐ 주택 또는 토지 보유자에 대하여 1차적으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재산세를 부과하고,
- ☐ 2차적으로 전국에 소재한 각 유형별(주택, 종합·별도합산토지) 과세대상 재산을 인별로 합산한 가액이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결정하여 고지하게 됩니다.
- * 재산세 : 주택은 개별 물건별 과세, 토지는 관내 소재한 토지를 합산하여 과세

② 종합부동산법 상 1세대 1주택자란?

- ☐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단독으로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를 의미합니다.

**③ 올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 ☐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국토교통부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이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하는 가격을 말합니다.
- 공동주택과 표준 단독주택 및 표준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외 단독주택 및 토지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가격을 공시합니다.
- ☐ 주택 공시가격은 4월 말, 토지 공시가격은 5월 말에 공시되며,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또는 물건소재지 관할 시·군·구 누리집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④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 지난해와 달라진 점은?

- ☐ 올해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로 인하되고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저가주택에 대한 특례가 도입되어 일정 요건을 갖춘 납세자의 경우 신청에 의해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을 적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⑤ 주택수에 따라 세율이 차등적용 되는데 주택수 계산 방법은?

- ☐ 선행세목인 재산세가 주택으로 과세되는 경우에만 종합부동산세도 주택으로 과세되기 때문에, 주택수 계산은 재산세 과세유형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 종합부동산세 세율적용 주택수는 인별(법인·단체 포함)로 전국에 보유하는 주택을 합한 개수입니다.
 - 주택의 부속토지만 보유한 경우 등 주택의 일부도 1개의 주택으로 보아 세율적용 주택수를 계산합니다.
 - 다만, 과세에서 제외되는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세율적용 시 주택수 계산 대상에서 제외되며,
 - 상속주택 및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해당 물건은 세율적용 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세율적용 주택수 계산 사례〉

구 분	주택보유 현황	주택 수
사례 1	· 서울 주택 2호*, 강원 1호 * 2호 중 1호는 합산배제 임대주택	일반 2주택
사례 2	· 서울 주택 1호(부부 공동명의) · 세종 주택 1호	조정대상지역 2주택
사례 3	· 부산 주택 2호 · 강원 주택 1호(부속토지만 소유)	3주택 이상

⑥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상한 제도란 무엇인지?

- ☐ 보유세제의 개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세부담의 일시적인 급증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세부담상한은 과세유형별(주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로 구분하여 적용합니다.
 - *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및 3주택 이상자(300%), 그 외 150% 적용
 - 또한, 과세유형별로 올해 부과된 재산세와 세부담상한 적용 전 종합부동산세 합계액이,
 - 직전연도 표준세율 재산세액 및 세부담상한 적용 전 종합부동산세 상당세액 합계액의 일정비율(150%,30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된 세액은 “0” 으로 보는 것입니다.

당해연도 총세액상당액		직 전 연 도 총세액상당액×한도비율
과세유형별로 올해 부과된 재산세액과 세부담상한 적용전 중부세액의 합계액 (재산세 + 중부세)	≤	과세유형별로 직전연도 표준세율 재산세액과 중부세상당세액 합계액의 일정한도액 (재산세+중부세) X150%, 300%

⑦ 과세대상 주택·토지 명세와 세액계산 상세내역을 확인하는 방법은?

- ☐ 홈택스*에서 과세대상 물건(주택·토지)과 세액계산 상세내역을 조회할 수 있고 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으며
- * 홈택스(www.hometax.go.kr) → 공동인증서 로그인 → 조회 / 발급 → 세금신고 납부 → 종합부동산세 과세물건 및 세액 상세내역 조회
 - 홈택스 이용이 어려운 납세자는 관할세무서에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 물건 명세 및 세액내역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⑧ 1주택을 배우자 또는 가족과 공동 소유 시 공제액은?

- ☐ 개인별로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가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며,
- * 1세대1주택자 11억 원 공제, 이외 주택자 6억 원 공제
 -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를 의미하므로,
 - 배우자 또는 세대원이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분 소유자별로 각각 6억 원씩 공제하는 것입니다.
 - 다만,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는 신청에 의해 1세대1주택 세액계산 방식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⑨ 조정대상지역 판단 기준은?**

- ☐ 종합부동산세 세율 적용 시 조정대상지역 소재 판정은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부산('22.9.26.) 세종('22.11.14.)과 같이 최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경우에도 과세기준일('22.6.1.)을 기준으로 조정대상지역으로 판단하여 종부세가 과세됩니다.

⑩ 개인이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합산배제는?

- ☐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18.9.14.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취득 장 기일반 민간임대주택은 합산배제가 제외(종부세 과세)됩니다.
 - 다만, '18. 9. 13.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 되는 경우는 합산배제가 적용됩니다.
 - * '18. 9. 14. 이후 조정대상지역 공고가 있는 경우는 조정대상지역 공고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것 포함

⑪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물건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기한 내(9.16.~9.30.) 신고하지 못한 경우는?

- ☐ 종합부동산세 과세제외 되는 임대주택 등 합산배제 요건(지자체, 세무서 사업자등록 등)을 갖춘 임대사업자가 합산배제 신고기간(9. 30.) 내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12. 1.~12. 15.)까지 추가로 합산배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는 고지와 관계없이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하고 납부할 세액은 금융기관 등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⑫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를 잘못된 경우에는?


- ☐ 종합부동산세가 합산배제되는 임대주택 등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합산배제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기간(12. 1.~12. 15.)에 과세대상으로 정정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미신고시 요건 충족 여부 등을 확인하여 추징하게 됩니다.

⑬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적용 시 납세의무자를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 ☐ 부부 중 지분율이 큰 자가 납세의무자이며, 동일한 경우에는 부부 간 합의에 따라 납세의무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지분을 판단은 공부상 면적 기준이 아니며, 주택과 부속토지분의 공시가격 합계액 중 부부 각자의 지분 공시가격이 차지하는 비율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⑭ 부부가 주택과 부속토지를 나누어 각각 소유한 경우에도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 특례 신청이 가능한지 ?

 (사례) 단독주택 : 주택 지분(남편 100%), 부속토지 지분(아내 100%)

- 주택과 부속토지를 나누어서 보유하고있더라도, 다른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⑮ 부부 공동명의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 특례 신청이 가능한지?

- 과세기준일 6.1. 현재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만을 소유하고 다른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에 1세대 1주택자 특례 적용이 가능하며,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의 납세의무자*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도 종부세법 시행령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1세대 1주택자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 * (납세의무자) 지분율이 큰 자, 지분율이 동일한 경우에는 선택
 - 다만, 납세의무자가 아닌 배우자가 공동명의 1주택 외에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 특례 적용이 불가합니다.

⑯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일시적 2주택 등 1주택자 및 법인 일반 누진세율 등 특례신청을 신청기간(9.16.~9.30.)에 하지 못한 경우 12월 정기신고 기간에도 신청이 가능한 것인지?

-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는 9월16일부터 9월30일까지 신고·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동 기간에 신고·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12월 정기신고 기간에 신고·신청할 수 있습니다.

⑰ 상속받은 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일로부터 5년간은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및 세율 적용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며,
 - 상속일로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도 지분율이 40%이하이거나,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6억 원(수도권 밖 3억 원) 이하이면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⑮ 경기도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3억 원 이하 주택도 지방 저가 주택으로서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 ☐ 수도권에 소재하는 모든 주택은 1세대 1주택자 특례 적용대상인 지방 저가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며, 수도권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경기도가 포함됩니다.

⑯ 지방 저가주택 2채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 ☐ 지방 저가주택을 2채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⑰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인지?

- ☐ 1세대 1주택자 특례 요건을 갖춘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을 함께 보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⑱ 1세대 1주택자 특례가 적용되는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은 과세를 하지 않는 것인지?

- ☐ 1세대 1주택자 특례가 적용되는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은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세액계산 하므로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됩니다.
- 다만, 특례 대상 주택은 과세표준에 합산한 공시가격에서 11억 원(1세대 1주택자 공제금액)을 공제하며, 해당 주택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⑳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신청 방법은?

- ☐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 만료 3일 전(12.12.(월))까지 관할세무서에 납부유예 신청서, 납세담보 제공서 등 납세담보 관련 서류를 제출하시면,
- 담당자가 제출서류 검토 후 납부기한까지 허가여부를 통지해 드립니다.

㉓ 납부유예 신청시 담보 제공 방법은?

- ☐ 납부유예 신청시에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담보의 종류별 제공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담보의 종류	제공방법
토지·건물	인감도장, 인감증명서(용도:근저당 설정) 2부를 지참하여 근저당권 설정 계약
금전·유가증권	공탁수령증 제출
납세보증보험증권·납세보증서	보험증권·납세보증서 제출

* 건물은 화재보험 가입(잔여기간 1년 이상)

㉔ 1주택과 상속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는지?

- ☐ 특례를 통해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납세자도 법적 요건을 갖춘 경우 납부유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㉕ 홈택스의 종합부동산세 관련 서비스 중 공동인증서로 접속이 필요한 것은?

- ☐ 홈택스에서 제공되는 종합부동산세 관련 서비스 중 공동인증서 필요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홈택스 서비스	공동인증서 필요	
	여	부*
종합부동산세 분납신청		○
종합부동산세 납부	○	
종합부동산세 과세물건 조회	○	
종합부동산세 신고(미리채움 활용)	○	
종합부동산세 신고(미리채움 미활용)		○

* ID와 비밀번호를 이용한 로그인 필요

㉖ 종합부동산세 전자신고 방법은?

- ☐ 공동인증서를 이용하여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한 다음 아래 접근 경로에 따라 신고·납부가 가능합니다.

* 홈택스(www.hometax.go.kr) → 공동인증서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부동산세 → 정기신고



* 이용 편의를 위해 「동영상으로 알아보는 정기신고」를 종합부동산세 신고기간에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㉗ 종합부동산세 전자신고 이외의 방법은?

- ☐ 공동인증서가 없거나 홈택스 이용 등이 어려워 신고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 신고서식을 국세청 누리집*에서 내려받아 작성하여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서 작성 후 제출하고 납부서를 제공받아 납부하시면 됩니다.
 -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국세신고안내 → 종합부동산세 → 주요서식 → 1.종합부동산세 신고서

㉘ 어떠한 경우에 고지·납부 대신 신고·납부할 수 있는지?

- ☐ 납세자가 신고를 원하거나 고지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납부고지서와 관계없이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초 고지된 세액은 취소됩니다.

㉙ 12.15.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지연 가산세는?

- ☐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고,
 - 세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후 1일마다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추가(5년간)됩니다.

㉚ 종합부동산세 세액을 잘못 신고한 경우 불이익은?

- ☐ 정당하게 신고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하게 되면, 적게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10%(부당한 과소신고는 40%)에 상당하는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며,
 -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 동안 과소세액에 1일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국세청, 기업의 국제거래에 대한 이중과세 부담 430건 해결

- 국세청, 2022. 11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18.3월 「상호합의담당관실」을 신설하고, 금년 10월까지 외국 국세청과의 상호합의절차(과세분 상호합의 및 정상가격방법 사전승인)로 납세자의 이중과세 문제 430건을 해결하였습니다.
- 「과세분 상호합의」는 세무조사로 납세자에게 발생한 이중과세 부담을 두 나라 과세당국이 협의하여 사후적으로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 신설 후 금년 10월까지 연평균 이중과세 해결 실적은 직전 5년('13~'17년, 20.2건)보다 94.6% 증가한 39.3건으로, 총 190건의 이중과세를 해결하였습니다.
- 또한 국세청은 국제거래가 있는 기업(해외진출 우리기업과 국내진출 외국기업)이 이전가격 세무조사에 대한 걱정 없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상가격*방법 사전승인」 제도를 활발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 * 정상가격 : 같은 그룹사가 아닌 제3자와의 거래 시 통상 적용되는 가격
 - '18년 이후 과세당국 간 사전 협의(240건)로, 이 제도의 적용을 받은 기업들은 평균 6년 4개월 간 양국의 이전가격 세무조사 위험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 해외진출 우리기업들이 현지 조세불복을 통해 이중과세를 해결하기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수반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호합의절차는 우리 기업의 이중과세 부담을 해소하는 효율적 제도입니다.
 - 국세청은 상호합의절차 활성화 및 신속한 이중과세 문제 해결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세정측면에서 적극 구축하겠습니다.

1 상호합의절차 개요

- 우리기업의 활발한 해외진출과 외국기업의 국내투자 확대는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큰 기여를



한 반면, 납세자 입장에서는 빈번한 이전가격*1 세무조사 노출과 이중과세*2 발생이라는 부담을 갖게 되었습니다.

- *1. 다국적 기업 내 관계회사들(예 : 국내 모회사와 해외 자회사) 간 국제거래 가격으로, 이를 통해 국가 간 과세소득의 배분이 결정됨
- *2. 2개 이상의 국가가 동일한 소득에 과세하여 다국적 기업의 조세부담이 가중되는 현상으로, 해당 기업의 입장에서는 원가부담 압력과 가격경쟁력 저하로 이어짐

□ 국제청은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및 조세회피 예방을 위한 협약」(이하 “조세조약”) 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세당국 간 상호합의절차(①과세분 상호합의, ②정상 가격방법 사전승인)로 이러한 납세자의 이중과세 문제를 사전·사후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 (과세분 상호합의*) 우리나라 또는 외국 과세당국의 국제거래 세무조사로 납세자에게 이중 과세 부담이 발생한 경우, 과세당국 간 협의를 통해 이를 해결하는 조세조약이 특별히 정한 사후적 권리구제 제도입니다.

* 과세분 상호합의 : Mutual Agreement Procedure(이하 “상호합의”)

- 주요 20개국(G20)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각 국에 신속하고 효과적인 이중과세 해결 노력을 주문하면서, 4가지 운영 기준*을 설정하고 평가를 통해 그 이행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 ① 이중과세 예방을 위한 제도 도입 ② 납세자의 상호합의 신청 보장 ③ 이중과세의 신속한 (평균 24개월 내) 해결 ④ 상호합의 결과의 이행

- (정상가격방법 사전승인*) 다국적 기업집단 내 관계회사 간 국제거래 가격(이하 “이전가격”)을 과세당국들의 협의로 사전에 결정하여, 국제거래 관련 조세분쟁을 예방하는 납세자 권리보호 방법입니다.

* 정상가격방법 사전승인 : Advance Pricing Arrangement

- 이를 통해 납세자는 잠재적인 이전가격 세무조사 위험을 방지할 수 있으므로, 안정적인 조세 환경에서 사업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2 그 간의 성과

□ 국제청은 과거 국제협력담당관실 내 상호합의팀이 이중과세 해결과 정상가격방법 사전승인 업무를 담당하였으나, 국회 및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의 지원으로 '18.3.30. 과(課) 단위의 「상호합의담당관실」을 신설하였습니다.

- 신설 이유는 ① 납세자의 상호합의·정상가격방법 사전승인 수요 증가 ② 조세조약 상 이중 과세 해결 의무의 충실한 이행 ③ 국제기준(평균 24개월 내 해결) 준수 ④ 상대국과의 대등한 협상력 확보(외국 협상 대표는 과장급 이상)입니다.
- 주어진 인력과 협상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외국 과세당국과 연 20회 이상 상호합의 협상(대면·전화·화상)을 하고 있으며, 올해는 10월까지 17개 과세당국과 23차례 상호합의 회

의를 진행하였습니다.

| '18~'22.10월 상호합의 회의 개최 횟수 |

(단위 : 회)

	'18	'19	'20	'21	'22.10.	합계
회의개최	24	25	20	20	23	112
상대 과세당국	16개	17개	10개	12개	17개	총 28개
	네덜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덴마크, 독일, 러시아, 말레이시아, 미국, 베트남, 사우디, 스웨덴, 스위스, 슬로바키아, 싱가포르, 영국, 이탈리아,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체코, 캐나다, 태국,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호주, 홍콩					

- 이중과세의 사후적 해결 : 코로나19 상황으로 '20~'21년 과세당국 간 대면회의에 제약이 있었으나, 화상·전화회의 및 활발한 서면교환을 통해 납세자의 이중과세 부담을 해결하였습니다.
- (수요) 상호합의담당관실 신설 후, 납세자의 연평균 이중과세 해결 요청은 47.6건으로 신설 전('13~'17년 평균 31.4건) 대비 51.6% 증가하였습니다.
 - (이중과세 해결) 같은 기간, 연평균 상호합의 처리실적은 직전 5년 ('13~'17년, 평균 20.2건)보다 94.6% 증가한 39.3건입니다.
 - 특히 상호합의 제도를 활발히 운영하는 선진국뿐 아니라, 우리 진출 기업이 많은 중국·인도·인도네시아 과세당국과의 상호합의 협상도 확대하여, 우리기업의 이중과세 부담 44건을 해결하였습니다.

| 신설 전·후 상호합의 신청과 처리 |

구 분	신설 전('13~'17)							신설 후('18~'22.10.)						
	'13	'14	'15	'16	'17	합계	평균	'18	'19	'20	'21	'22	합계	평균
신청건수	24	32	41	28	32	157	31.4	34	51	48	58	39	230	47.6
처리건수	12	15	6	36	32	101	20.2	32	33	31	34	60	190	39.3

- ※ 작성기준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시일과 종료일 적용
- (처리기간) 국세청은 신속한 이중과세 해결이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 권고에 따라 '16년부터 처리기간(개시일~종료일)을 관리하고 있으며, 상호합의담당관실 신설 후 '22.10월까지 평균 처리기간은 37개월입니다.
 - 금년에 처리기간이 늘어난 이유는 과세당국 간 입장 차이로 협상이 3년 이상 장기간 진행된 23건을 우선 해결하였기 때문입니다.

| 상호합의 처리기간('16~'22.10.) |

연 도	'16	'17	'18	'19	'20	'21	'22	'18~'22 평균
처리기간	38개월	31개월	42개월	43개월	29개월	30개월	40개월	37개월

- ※ 작성기준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시일과 종료일 적용



- 사전적 이중과세 방지 : 이전가격 세무조사 위험을 줄이기 위한 납세자의 수요는 꾸준히 늘어났고, 국세청도 기업의 세정환경 개선 및 조세 불확실성 축소를 위해 정상가격방법 사전승인 제도를 활발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 (수요) 상호합의담당관실 신설 후, 납세자의 연평균 정상가격방법 사전승인 신청은 58.6건으로 신설 전('13~'17년 평균 48.2건) 대비 21.6% 증가하였습니다.
 - (실적) 같은 기간, 연평균 정상가격방법 사전승인 처리실적은 직전 5년(연평균 39.0건)보다 27.4% 증가한 49.7건입니다.

| 신설 전·후 정상가격방법 사전승인 신청과 처리 |

구 분	신설 전('13~'17)							신설 후('18~'22.10.)						
	'13	'14	'15	'16	'17	합계	평균	'18	'19	'20	'21	'22	합계	평균
신청건수	50	50	43	53	45	241	48.2	70	59	59	47	48	283	58.6
처리건수	38	37	42	39	39	195	39.0	45	45	52	39	59	240	49.7

※ 작성기준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시일과 종료일 적용

- (이중과세 예방 효과) 과세당국 간 합의된 정상가격방법 사전승인 결과(적용기간, 정상가격 방법, 목표 이익수준 등)를 성실히 이행한 납세자는 일정기간 양국 모두에서 이전가격 세무조사를 받지 않습니다.
- 최근 5년 납세자는 정상가격방법 사전승인 제도를 통해 평균 6년 4개월 동안 이전가격 세무조사의 위험에서 벗어났습니다.

| 정상가격방법 사전승인을 통한 이전가격 세무조사 예방기간 |

연 도	'18	'19	'20	'21	'22	평균
이전가격 조사 예방기간	7년	7년 1개월	6년 3개월	6년 6개월	5년 6개월	6년 4개월

3 향후 계획

- 해외진출 우리기업들이 현지에서의 조세불복을 통해 이중과세를 해결하기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수반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호합의절차는 우리기업의 이중과세 문제 해결을 위한 효율적 제도입니다.
- 납세자의 상호합의절차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세청은 주어진 인력의 효율적 활용과 업무절차 개선으로 상호합의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등 우리기업의 이중과세 위험을 신속하게 해결하겠습니다.
 - 또한 납세자가 적극행정을 체감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와의 상호합의 경험은 많지 않으나 우리기업의 진출이 활발한 개발도상국 및 중동 국가와의 협상을 확대하겠습니다.
- 아울러 국내진출 외국기업에 대해서도 세무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조세조약상 차별금지원칙

에 따라 상호합의절차를 운영하여 이중과세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참고 1 - 과세분 상호합의 신청 개요

국세청은 상호합의절차에 대한 납세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납세자를 위한 상호합의절차 안내*」를 매년 발간하고 있습니다.

* 국세청(www.nts.go.kr) > 국세정책/제도 > 통합자료실 > 국세청 발간책자 > 분야별해설 책자 > 국제조세

☐ 과세분 상호합의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 (신청자격)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과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은 개별 조세조약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아래 3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구분에 따른 자에게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 § 42①)
 - ① 조약의 적용 및 해석에 관하여 계약상대국과 협의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 기획재정부장관
 - ② 계약상대국의 과세당국으로부터 조세조약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과세처분을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 국세청장
 - ③ 조세조약에 따라 우리나라와 계약상대국 간에 조세조정이 필요한 경우 : 국세청장
- (신청방법) ②, ③에 따라 신청하려는 납세자는 과세사실을 안 날부터 3년 이내에 「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서」와 부속서류를 첨부하여 국세청 상호합의담당관실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국조령 § 82 및 국조칙 § 48)
- 과세분 상호합의 신청 접수 후의 원활한 상호합의 진행을 위해 신청 전 사전상담을 권장하고 있으며 사전상담을 원하는 납세자는 유선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044-204-2965)

<과세분 상호합의 신청 시 제출 서류>

과세분 상호합의 신청 시 「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서」를 국조법 시행령 제82조 제1호~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48조 제2항 제1호~제7호에 해당하는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 2 - 정상가격방법 사전승인 신청 개요

국세청은 납세자가 정상가격방법 사전승인 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진행절차와 관련 통계를 반영한 「연차보고서*」를 매년 발간하고 있습니다.

* 국세청(www.nts.go.kr) > 국세정책/제도 > 통합자료실 > 국세청 발간책자 > 분야별해설 책자 > 국제조세

☐ 정상가격방법 사전승인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 (신청자격) 국조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있는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 포함)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국제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국조법 § 14)
- (신청방법) 납세자가 사전승인 신청 대상기간의 최초 과세연도 개시일의 전날까지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신청서」와 부속서류를 첨부하여 국세청 상호합의담당관실에 제출하면 됩니다.(국조령 § 26①)
- 다만, 국세청은 정상가격방법 사전승인 신청 접수 후의 원활한 상호합의 진행을 위해 신청 전 사전상담을 권장하고 있으며 사전상담을 원하는 납세자는 유선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044-204-2965)

<정상가격방법 사전승인 신청 시 제출 서류>

정상가격방법 사전승인 신청 시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 신청서」를 국조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호~제6호에 해당하는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 3 - 과세분 상호합의 사례

기계장치 부문 중견기업인 A사의 유럽 내 판매법인 B사는 5년에 걸친 외국 국세청의 이전가격 세무조사로 0,000억원을 추징 받았습니다. 외국 국세청의 주장은 B사가 A사로부터 너무 비싼 가격으로 기계장치를 구입하여, B사의 과세소득이 부당하게 감소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과중한 추정세액과 이중과세 부담을 고민하던 A사의 상호합의 신청으로 두 나라 국세청 간 상호합의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양 측의 팽팽한 줄다리기는 계속되었고, 서울에서 6번째 협상이 이루어졌습니다.

외국 국세청은 B사와 비슷한 판매활동을 하는 10개 회사들의 소득수준을 고려할 때, 과세처분의 75% 유지를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한국 국세청은 150장에 달하는 각종 증빙서류(조직도, 종업원 수, 계약서 및 거래명세서 등)를 제시하면서, 별도의 영업조직이 없는 B사는 단지 A사와 현지 고객을 연결하는 중개용역 사업자임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과세처분의 90% 철회를 요구하였습니다. 외국 국세청 대표단은 2시간 이상의 내부회의를 거친 후, “사실관계와 국제기준에 비추어 한국의 주장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라고 하며 우리의 주장을 전격 수용하였고, 이에 납세자의 이중과세는 완전하게 해소되었습니다.

※ 실제 여러 사례를 각색하여 재구성한 사례입니다.

외화자금을 빼돌리고 국부 유출을 고착화하는 역외 탈세자 53명 세무조사

- 국세청, 2022. 11

- (조사배경) 주요국의 긴축 통화정책에 따라 국제금융시장에서 금리가 상승하고 외환시장에서 환율이 불안정한 상황 속에 국부유출 구조를 고착화하고 원화 가치 하락을 부추기는 역외탈세 혐의가 확인되었습니다.
 - 실질과 다르게 사업구조를 꾸며놓고 내국법인의 자금 또는 소득을 국외 이전하거나(국내 → 국외), 국내 반입되어야 할 소득을 현지에서 빼돌리면서(국외 ⇄ 국내) 외화자금을 지속적으로 유출하였습니다.
- (조사대상) 이번 역외탈세혐의 조사대상자 53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형 ①) 법인의 외화자금 유출 및 사적 사용 (24명)
 - 해외투자 명목의 자금 유출, 가공의 외주거래(off-shoring), 국외용역 매출누락을 통해 법인의 외화자금을 유출하고 사적 사용한 탈세혐의자
 - (유형 ②) 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인 무형자산 부당 이전 (16명)
 - 내국법인의 무형자산을 정당한 대가 없이 국외로 이전하거나 국내 원천기술을 해외 제3법인에 부당하게 무상제공한 탈세혐의자
 - (유형 ③) 다국적기업의 국내이익 편법 반출 (13명)
 - 코로나 19 특수로 얻은 국내 자회사 이익을 부당하게 국외 이전하거나 사업구조를 인위적으로 개편하여 조세를 회피한 일부 다국적기업
- (향후계획) 국세청은 적법절차에 따라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정상 거래로 가장한 지능적 역외탈세에는 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여 공정과세의 가치를 지켜나가겠습니다.

1

세무조사 배경

- 최근 주요국의 긴축 통화정책으로 국제금융시장의 금리가 상승하여 자본의 이동성이 증가하



- 고, 세계경제가 불황 국면으로 전환되면서 우리나라의 무역수지가 적자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예상과 달리 급등락을 반복하여 일부 기업은 환위험에 노출되었으며 또 다른 기업들은 원자재 수입비용, 해외 물류비 상승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기업이 과세를 회피하기 위해 국내 자금 또는 소득을 국외로 부당이전하거나(국내 → 국외), 국내로 반입되어야 할 소득을 해외 현지에서 빼돌린(국외 ⇄ 국내) 혐의가 포착되었습니다.
- 기업과 정부가 복합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힘쓰고 있는 가운데 해당 기업과 사주는 반사회적인 역외탈세로 환율안정 방어수단인 외화자금을 빼돌리며 원화가치 하락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어려운 경제여건에 부담을 주면서 국부를 유출하는 역외탈세 혐의자에 대해 조세법률주의·조세공평주의에 근거한 적법·공정 과세원칙에 따라 세무조사를 착수하였습니다.

2

세무조사 유형별 탈세혐의

- 세무조사대상 유형은 ❶ 법인의 외화자금 유출 및 사적 사용 (24명), ❷ 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인 무형자산 부당 이전 (16명), ❸ 다국적기업의 국내이익 편법 반출 (13명) 등 3가지입니다.

❶ 법인의 외화자금 유출 및 사적 사용

- ① (투자 명목 자금유출) 현지법인 투자자금을 회수하지 않거나 국외 차명주주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자금을 반출한 후 사주 일가에게 이익 분여
- ② (실체 없는 외주거래) 사업기능이 없는 해외 중간지주사나 실체가 없는 페이퍼컴퍼니와의 외주거래(off-shoring)를 가공 계상하여 법인자금 유출
- ③ (국외용역매출 상승누락) 사주가 법인의 국외용역 대가를 미신고하며 부당수취한 후 해외체재비, 유학비, 원정도박 등에 사적 사용

❷ 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인 무형자산 부당 이전

- ① (무형자산 부당이전) 내국법인이 기술, 상표권, 가상자산 등의 무형자산을 대부분 개발했음에도 정당한 대가 없이 국외로 이전
- ② (원천기술 무상사용) 내국법인의 원천기술을 해외제조법인이 무상활용하고, 사주일가가 현지법인에 쌓인 부당이득을 급여배당의 형태로 유출

❸ 다국적기업의 국내이익 편법 반출

- ① (코로나19 수혜이익 이전) 코로나19 특수로 증가한 국내자회사 소득을 이전가격 조작 및 편법 배당을 통해 국외 이전
- ② (인위적 사업구조 개편) 다국적기업이 그룹 사업구조를 개편하면서 모회사가 얻는 소득유형 등을 실질과 다르게 변경하여 국내과세 회피

- 이번 조사대상자의 특징은 단순히 역외거래의 은밀성에 기반한 기존 탈세수법과 달리, 사업 구조를 실질과 다르게 꾸며놓고 탈세거래를 정상거래로 위장하면서 국부유출 구조를 고착화 했다는 점입니다.

기존 역외탈세	역외탈세 정보교환 과세당국 간 공조	최근 역외탈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탈세거래 은닉 (비밀계좌, 미신고 국외 소득법인) · 조세포탈혐의 개연성 	<p>⇒ ⇒ ⇒</p> <p>금융비밀주의 해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탈세거래를 정상거래로 설계 (실체사업·거래구조 위장) · 실질과세 > 판례법 형성

[탈세유형 1] 법인의 외화자금 유출 및 사적 사용 : 24명

- 첫 번째 유형은 자본·용역 거래가 수출입 통관내역이 없다는 점을 악용하여 해외 투자·외주 명목으로 외화자금을 불법 반출하거나 해외매출을 미신고하는 경우입니다.
 - 자본거래 측면에서, 현지법인 투자 명목으로 송금한 자금을 회사 운영·청산 과정에서 미회수하거나 국외 차명주주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자금을 반출한 후 사주가 사적으로 사용하였습니다.
 - 매입거래 측면에서, 사업기능이 없는 해외 중간지주사나 용역수행 능력이 없는 현지법인에 가공의 용역을 외주(off-shoring)하는 방식으로 외화자금을 해외로 계속 유출한 혐의자가 확인되었습니다.
 - 매출거래 측면에서, 법인의 해외용역수행 대가를 사주가 수익적 소유자인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받는 방식으로 소득을 상습 누락하고 사주일가의 해외체제비, 사치품 구매,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였습니다.
- 조사대상자의 주요 외화자금 반출방식 (탈세유형 1)

최근 5년간 조사대상자의 주요 외화자금 반출방식은 당장의 실물거래가 없어 거래의 실체를 숨기기 용이

[탈세유형 2] 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인 무형자산 부당 이전 : 16명

- 두 번째 유형은 대부분의 기업이 경쟁력과 부가가치의 원천인 무형자산을 지키려는 것과는 달리 국내무형자산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정당한 대가 없이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입니다.
 - 내국법인이 개발한 무형자산을 국외특수관계자가 적정대가 지불 없이 자기 명의로 등록하고 사용료 수익을 가로챈 사례가 적발되었습니다.
 -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내국법인이 개발을 주도하였음에도 페이퍼컴퍼니가 소유자로서 발행 이익을 독점하기도 하였습니다.
 - 또한, 현지법인에 원천기술을 무상 제공하며 이익을 분여한 후 현지법인을 사주 자녀의 경



영권 승계에 이용한 사례도 확인되었습니다.

■ 무형자산 무상제공에 따른 영업이익률 차이 (탈세유형 2)

구분('19~'21년 평균)	X사	Y사	Z사
해외자회사	12.3%	11.2%	5.8%
조사대상자	-3.0%	3.4%	0.3%

[탈세유형 3] 다국적기업의 국내이익 편법 반출 : 13명

□ 세 번째 유형은 일부 다국적기업이 시장지배력을 통해 국내소비자에게 판매하며 얻은 이익을 극대화하면서도 세법과 조약상 적절한 이익을 국내자회사에 남기지 않고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입니다.

- 국내자회사는 코로나19 특수로 매출이 크게 늘어나자 해외모회사로부터 수입하는 원재료·제품을 고가로 매입하거나, 자체 생산한 제품을 국내에 판매하는 가격보다 해외모회사에 저가로 판매하였고
- － 해외모회사는 국내 유보이익을 배당으로 가져가면서 계획적으로 제한세율이 낮은 조세조약을 부당 적용하여 과세를 회피하였습니다.
- 일부 다국적기업이 형식적으로 사업구조를 개편하면서 모회사가 국내자회사로부터 얻는 소득유형을 실질과 다르게 위장(사용료소득 ⇒ 사업소득)하여 과세를 회피하는 사례도 확인되었습니다.

■ 사업개편 전후 영업이익률 (탈세유형 3)

구 분	X사	Y사	Z사
개편 前(3년 평균)	19.4%	14.8%	34.7%
최근 사업연도(근사치)	2%	1%	10%

3 추진성과

□ 국세청은 역외탈세 대응을 핵심과제로 선정하고, 역외정보를 상시 수집하면서, 파급력을 높이기 위해 동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최근 3년간 역외탈세 조사실적(추징세액 4조 149억 원, '19~'21년) 중 동시조사를 통해 총 1조 6,559억 원의 세금을 추징하였습니다.

□ 동시조사 실적 중 세목별 추징세액은 법인세 1조 736억 원, 부가가치세 4,458억 원, 소득세 697억 원, 증여세 494억 원 순입니다.

- 부가가치세 추징이 많은 이유는 국내사업장을 은닉한 다국적기업의 탈세에 적극 대응한 결

과로서 미신고 과세기간 동안에 해당 사업장에서 이루어진 전체 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했기 때문입니다.

- 또한, 업종별로 살펴보면 서비스업 9,738억 원, 제조업 4,952억 원, 도소매업 861억 원 순으로 서비스업이 가장 큰데,
 - 수출입 통관이 확인되는 재화거래보다 실체를 숨기기 용이하여 역외탈세에 이용될 개연성이 높은 용역거래에 세무조사 역량을 집중한 결과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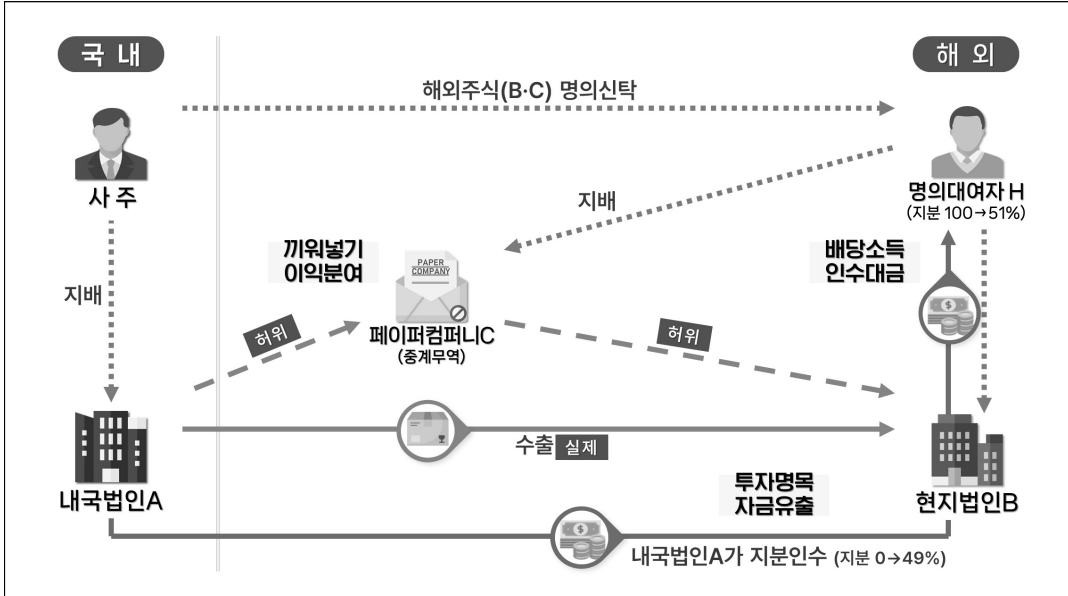
4 향후 조사방향

- 역외탈세는 세수 일실과 공정성 훼손에 그치지 않고 국부가 부당유출 되고 과세주권이 침해되는 반사회적 위법행위입니다.
 - 이번 역외탈세혐의 조사대상자는 외환 확보가 중요한 시기에 외화자금을 유출함으로써, 외환위기 때 온 국민이 힘을 모아 위기에 처한 기업을 다시 일으킨 역사를 무색하게 하고 있습니다.
- 이번 역외탈세조사에서 외환송금내역, 수출입 통관자료, 해외투자명세를 철저히 검증하고 세법과 조세조약에 따라 법인 사주를 비롯하여 관련인들까지 포렌식, 금융거래조사, 과세당국 간 정보교환 등을 통해 끝까지 추적하여 과세하겠습니다.
 - 아울러 조세포탈혐의가 확인되면 범칙조사를 통해 고발 조치하면서 역외탈세 대응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걸맞게 엄정 처리하겠습니다.
- 앞으로도 국세청은 조세법률주의, 조세공평주의 그리고 공정과세 원칙을 세무조사의 최우선 가치로 두고 적법절차 및 적법과세를 세무조사의 관행과 문화로 정착시키는 한편,
 - 지능적·반사회적 역외탈세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역량을 계속 집중하면서 과세주권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례 1

사주가 차명 보유한 현지법인에 투자 명목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하고, 끼워넣기 수출 거래로 사주에게 이익분여



□ 혐의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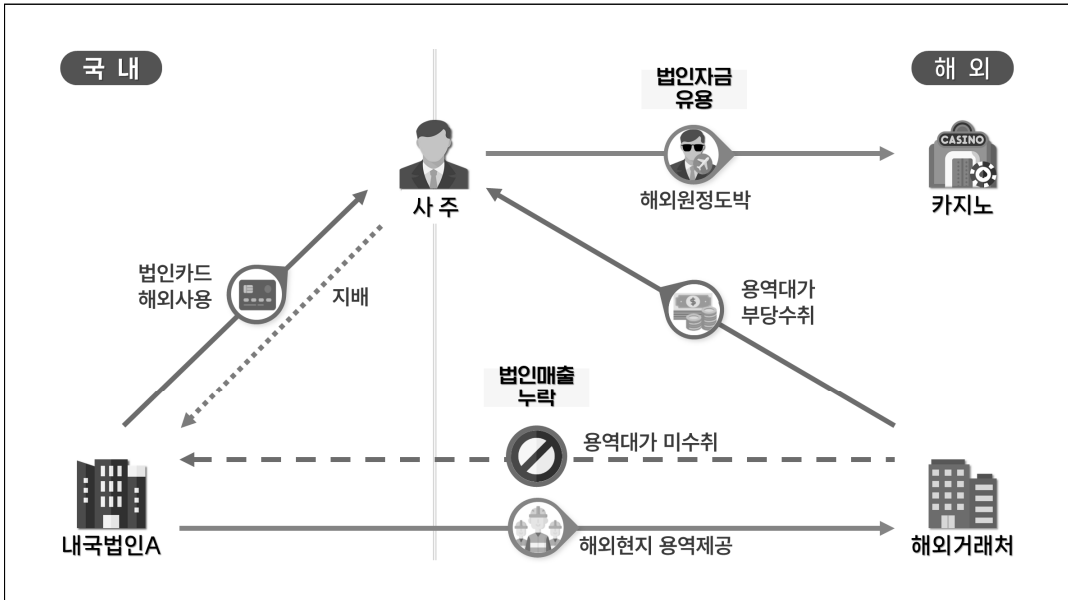
- (투자명목 자금유출) 내국법인 A는 사주가 차명 소유한 현지법인 B 지분 49%를 해외시장 진출 명목으로 인수하고 인수대금은 명의대여자인 H를 통해 사주의 해외자금으로 축적
- (배당소득 은닉) 현지법인 B는 A의 제품을 판매한 수익으로 배당을 실시하였고 사주는 배당금을 H의 명의로 수취한 후 소득 미신고
- (끼워넣기 이익분여) 페이퍼컴퍼니 C는 내국법인 A로부터 제품을 매입해서 현지법인 B에 판매하는 중계무역 거래 진행
 - 사주가 차명 소유한 C는 실체가 없어 사업수행 능력이 없는 법인으로서 내국법인 A가 현지법인 B와의 거래에 끼워 넣어 이익 분여

□ 조사방향

- 사주의 지분 양도소득 및 배당소득 미신고에 대해 과세하고, 내국법인 A가 끼워넣기 거래로 C에게 분여한 소득에 대해 과세

사례 2

법인 직원이 국외에서 수행한 용역 매출을 신고 누락한 후 사주가 해외에서 대가를 수취하여 원정도박 등에 사적 사용



□ 혐의내용

- (법인매출 누락) 내국법인 A는 사주 및 직원이 해외거래처에 출장하여 용역을 제공하면서 용역대가 미수취
 - － 용역대가 상당액을 사주가 현지에서 외화현금 등으로 수취하고 관련 매출 국내 신고 누락
- (법인자금 유용) 사주는 현지에서 수취한 자금과 함께 내국법인 A의 법인카드를 해외체류비, 원정도박에 사적 사용
 - － 특히, 법인카드를 카지노 호텔에서 사용한 것으로 거짓 결제한 후 대금을 돌려받으면서 상습적으로 도박자금 마련 (4년 간 64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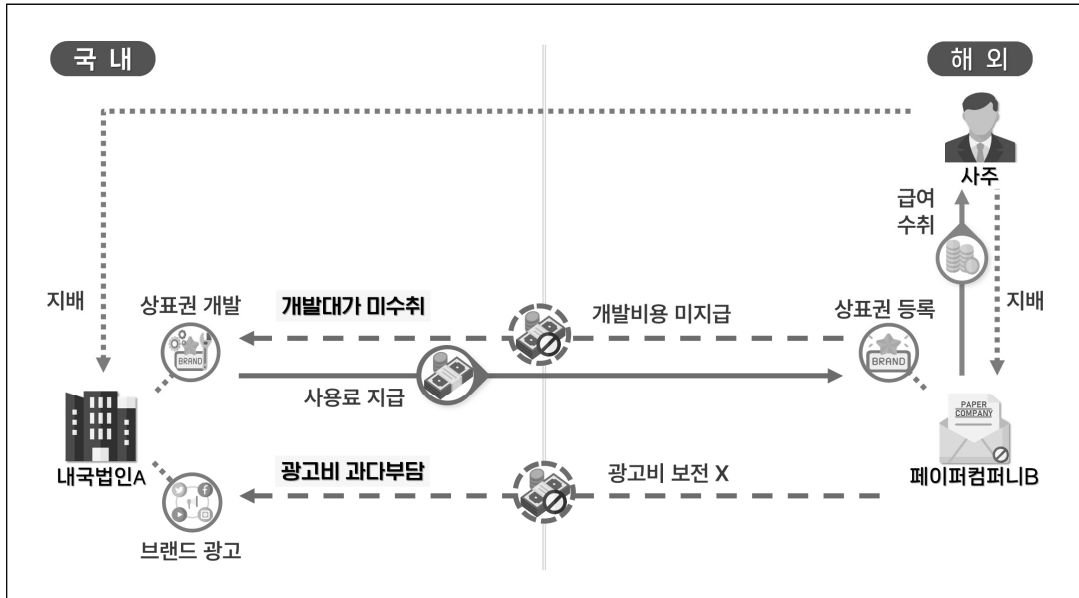
□ 조사결과

- 내국법인 A가 미수취한 용역대가, 사주의 법인자금 사적사용 등에 대해 세액 00억 원 추정



사례 3

사실상 국내 개발한 무형자산을 사주 소유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등록하고 내국법인이 후속 비용까지 부담



□ 혐의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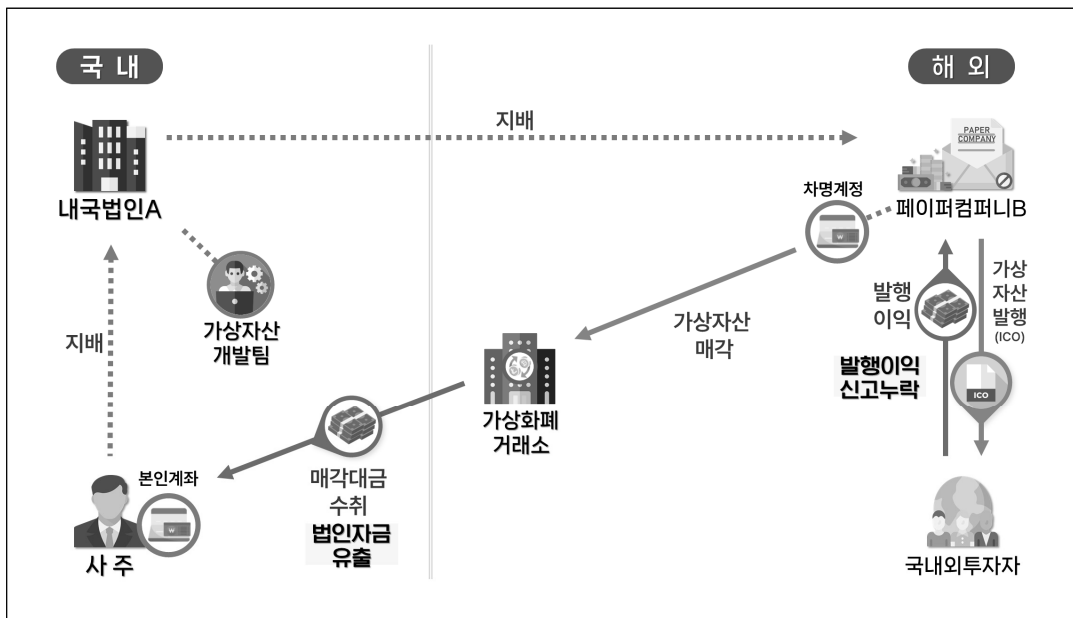
- (무형자산 개발대가 미수취) 내국법인 A는 자기 자금을 부담하여 상표권을 직접 개발하고도 사주 소유 페이퍼컴퍼니 B 명의로 등록
 - 내국법인 A는 B에게 상표권 사용료까지 지불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표권 가치 유지를 위한 콘셉트 개발 등의 비용도 부담하게 부담
 - (광고비 과다 부담) 상표권 소유자인 페이퍼컴퍼니 B가 주로 부담해야 할 브랜드 광고비까지 내국법인 A가 대부분 부담
- ⇒ 결국 내국법인 A는 페이퍼컴퍼니 B에게 상표권 개발비와 상표권 사용료, 브랜드 광고비까지 삼중으로 자금 유출

□ 조사결과

- 내국법인 A가 페이퍼컴퍼니 B를 위해 매년 부담하게 부담하고 있는 개발비와 광고비에 대해 과세하여 세액 000억 원 추징

사례 4

내국법인이 개발한 가상자산을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발행하여 이익을 신고 누락한 후 일부 수익을 사주가 부당 수취



□ 혐의내용

- (가상자산 발행이익 누락) 내국법인 A는 자신의 사업 플랫폼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상자산을 주도적으로 개발하였음에도
 - 페이퍼컴퍼니 B의 명의로 발행*하였고 가상자산 발행이익을 B에 귀속시키면서 국내 신고 누락
- * Initial Coin Offering : 가상자산 사업자가 신규 가상자산을 일반에 공개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일부를 판매하여 개발비를 보전받고 수익과 자금을 확보하는 방식
- (법인자금 유출) 사주는 B가 차명계정으로 관리하던 가상자산을 거래소에서 매각하고 그 대금을 본인의 국내계좌로 부당 수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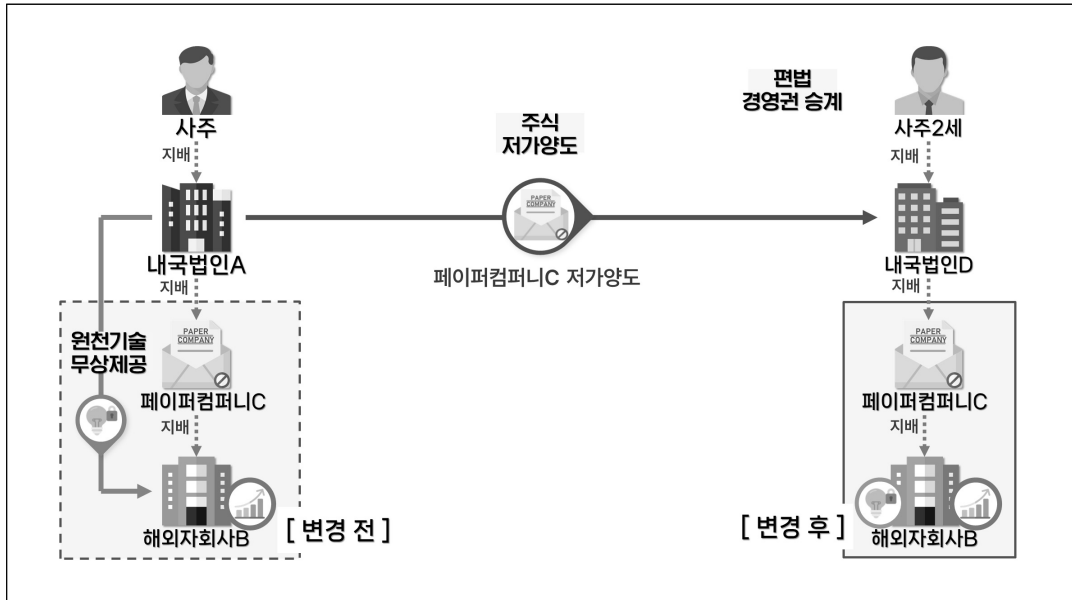
□ 조사방향

- 발행이익을 내국법인 A의 소득으로 보아 과세하고 사주가 수취한 자금은 상여로 과세하는 한편, 범칙행위 확인 시 조세범칙조사로 전환



사례 5

원천기술을 무상제공하며 키운 알짜 해외자회사 지분을 사주 2세가 지배하는 내국법인
인에 저가 양도하며 경영권 승계



□ 협의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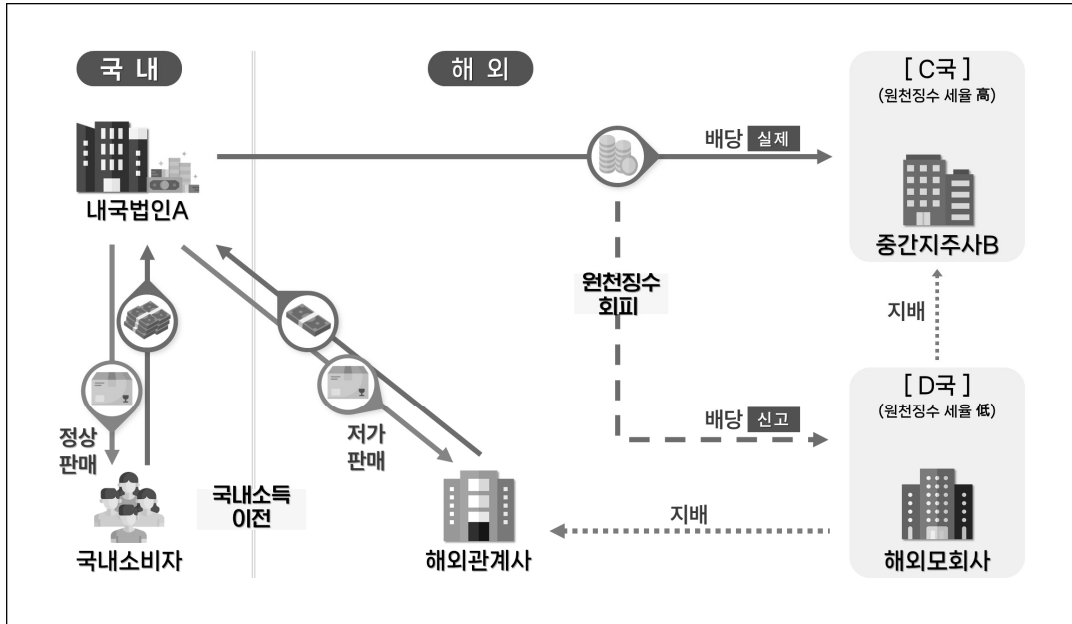
- (해외 중간지주사 주식 저가양도) 내국법인 A는 해외자회사 B에 원천기술을 무상제공하면서 해외자회사 B가 초과이익을 쌓도록 노력
 - A는 페이퍼컴퍼니 C를 설립 후 해외자회사 B의 지분을 C에 현물출자하면서 C를 해외 중간지주사로 개편 (그림 [변경 전])
 - 그 후, 해외 중간지주사가 된 C의 지분을 사주 2세가 대표인 내국법인 D에 저가양도하면서 이익 분여 (그림 [변경 후])
- (편법 경영권 승계) 『원천기술 무상제공 → 중간지주사 현물출자 → 중간지주사 주식 저가양도』로 이어지는 지배구조 변경을 거쳐
 - 사주 2세가 초과이익이 발생하는 해외 핵심자회사 B를 지배하게 되면서 경영권을 편법으로 승계

□ 조사방향

- 주식(페이퍼컴퍼니 C) 저가양도 및 원천기술 무상제공에 대해 과세

사례 6

코로나19 특수로 얻은 이익을 해외관계사에 저가판매를 통해 이전하고, 남은 유보이익도 편법 배당으로 유출



□ 혐의내용

- (국내소득 이전) 다국적기업의 자회사인 내국법인 A는 코로나19 특수로 전세계적으로 수요가 급증하자 국내소비자에 비해 해외관계사에 제품을 저가로 판매하여 소득을 국외로 이전
 - 중간지주사 B가 국내유보된 영업이익마저 수천억 원의 배당으로 수취
 - (원천징수 회피) 배당소득의 실제 귀속자가 인적·물적 실체를 가진 C국 소재 중간지주사 B임에도 도관회사로 위장
 - 내국법인 A는 배당소득의 실제 귀속자를 D국 소재 해외모회사로 신고하면서 조세조약 상 원천징수 세율 차이*를 악용
- *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이 C국은 고세율, D국은 저세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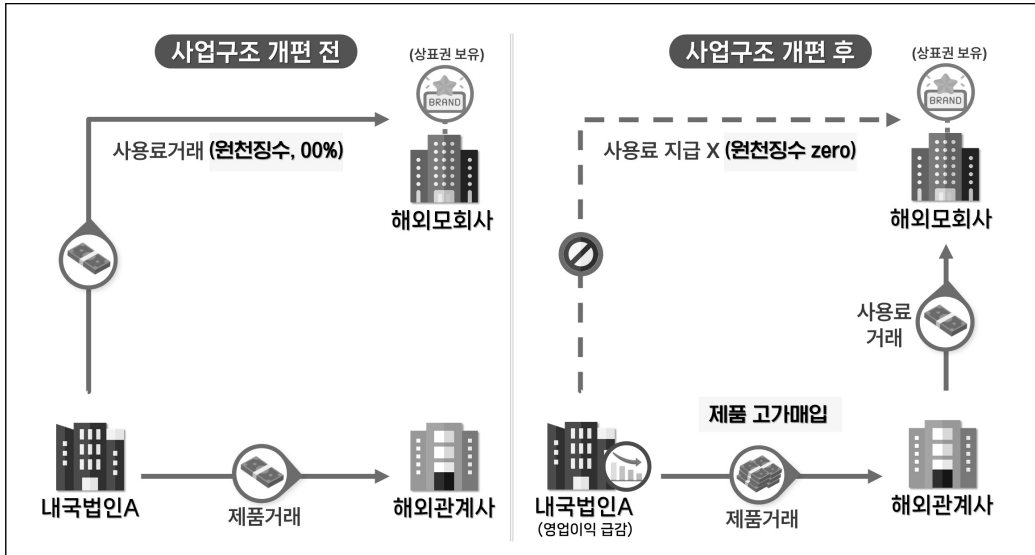
□ 조사방향

- 내국법인 A의 국내소득 이전에 대해 정상가격으로 조정하고, 국내 원천 배당소득에 대해 C국과의 제한세율로 과세



사례 7

경제적 실질은 그대로인데도 사업구조 개편으로 사용료 지급거래를 제품 매입거래로 위장하여 원천징수 회피



□ 혐의내용

- (사업구조 개편 전) 내국법인 A는 해외관계사로부터 제품을 수입하고 상표권자인 모회사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면서 원천징수 실시
- (사업구조 개편 후) 국내이익이 급증하자 거래의 경제적 실질은 바뀌지 않았는데 법적 형식만 변경하며 인위적으로 사업개편* 실시
 - * 해외관계사가 모회사와 상표권 사용계약을 맺고 A를 단순 판매업자로 변경, 실제로는 A가 여전히 상표권을 활용하여 각종 마케팅 기능을 수행
- － 결과적으로, 내국법인 A는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지만 해외관계사에 엄청난 수입대금을 지불하면서 소득이 국외 이전되고 영업이익 급감

⇒ A의 사용료 원천징수 세액은 0, 법인세도 급격히 감소

□ 조사결과

- 원천징수 회피한 사용료에 대해 세액 0,000억 원 추징하고 국외로 부당이전한 소득 0,000억 원에 대해 과세